

目次

◆ プログラム ◆ (日本語)	4
◆ 프로그램 ◆ (한국어)	6
【第1セッション】	10
【主催者の開催辞】 (日本語)	10
【주최자의 개회사】 (한국어)	14
【基調報告】	20
慰安婦合意と「和解・癒し財団」の事業推進方向(日本語)	20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 재단>의 사업추진 방향(한국어)	27
日韓政府合意を完成させ改善する道を考える(日本語)	40
한일정부합의를 완성시켜 개선하는 길을 생각하다(한국어)	48
【第2セッション】	64
日韓国際シンポジウム「政府間合意以後の慰安婦問題」メモ(日本語) ..	64
한일 국제심포지엄 「정부간 합의 이후의 위안부문제」 메모(한국어) .	67
慰安婦問題に関する外相合意について考える(日本語)	74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생각하다(한국어)	78
12・28 慰安婦合意と韓日関係(日本語)	85
12.28 위안부 합의' 와 한일관계(한국어)	88
韓日政府の2015 日本軍「慰安婦」合意、廃棄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語)	91
.....	
한일 정부의 2015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시켜야 한다. (한국어)	95

목차

◆ プログラム ◆ (日本語).....	4
◆ 프로그램 ◆ (한국어).....	6
【제 1 세션】	10
【主催者の開催辞】 (日本語).....	10
【주최자의 개회사】 (한국어).....	14
【基調報告】	20
慰安婦合意と「和解・癒し財団」の事業推進方向(日本語)	20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 재단>의 사업추진 방향(한국어).....	27
日韓政府合意を完成させ改善する道を考える(日本語)	40
한일정부합의를 완성시켜 개선하는 길을 생각하다(한국어).....	48
【제 2 세션】	64
日韓国際シンポジウム「政府間合意以後の慰安婦問題」メモ(日本語).....	64
한일 국제심포지엄 「정부간 합의 이후의 위안부문제」 메모(한국어)....	67
慰安婦問題に関する外相合意について考える(日本語).....	74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생각하다(한국어)	78
12.28 慰安婦合意と韓日関係(日本語)	85
12.28 위안부 합의와 한일관계(한국어)	88
韓日政府の2015日本軍「慰安婦」合意、廃棄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語)	91
한일 정부의 2015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시켜야 한다.(한국어)	95

◆ プログラム ◆ (日本語)

日韓国際シンポジウム「政府間合意以後の慰安婦問題」

- 【日時】 2016年7月31日(日) 13時～18時30分
【場所】 東京大学駒場Iキャンパス(教養学部)
21KOMCEE-West レクチャーホール
【言語】 日韓同時通訳
【後援】 韓国学中央研究院
【無料】 事前登録なし
【主催】 東京大学グローバル地域研究機構アジア地域研究センター
韓国学研究部門

【趣旨】

2015年末に慰安婦問題に関する日韓政府間合意が成立したにもかかわらず、日韓双方でそれを無効化させるような力学が少なからず働き、先行きは不透明である。というのも、政府間合意をめぐる解釈は両極に分かれ、合意後に問題が解決に向かっている明らかな兆しが見えない。「合意は最終決着であり、完全に決着がついたので、もうこれからは一切問題にするべきでは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それを認められないのであればもはやどうしようもない」という主張がある。その一方で、「当事者やその支援運動が要求した『法的責任』も、それに基づく『賠償』も認められていない不十分なものであるため、合意は無効だ」という主張がある。

こうした状況の中、東京大学韓国学研究部門は、慰安婦合意やそれをめぐる主張を一刀両断に否定するのではなく、いかに、政府間合意に魂を込めて活かし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課題として考え、本シンポジウムを企画した。研究や活動分野、また立場や考えが異なる専門家が集まり意見を交換することで、より良いアイデアを出すための一歩を踏み出せ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る。本シンポジウムは、お互いが一同に会し互いの意見を聞き、理解することで、意見の差を埋めて慰安婦問題そのものを解決するための智恵を出しあうことを目標としている。日韓関係および韓国研究を専攻する学内の学生だけでなく、学内外の皆さまにもお越しいただき、共に考察を深め、日韓関係の今後について共に考えていきたい。

【第1セッション】 総合司会 長澤裕子（東京大学）

・13時～13時10分 開会の挨拶 木宮正史（東京大学）

・13時10分～14時10分 基調報告

李元徳（国民大学 財団理事）：「和解・癒し財団」設立とその方向

和田春樹（東京大学名誉教授）：

「日韓政府合意を完成させ改善する道を考える」

【第2セッション】 慰安婦合意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のか

・14時15分～15時45分 司会 木宮正史

・パネリスト

渡辺美奈（WAM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岸俊光（毎日新聞）

箱田哲也（朝日新聞）

南基正（ソウル大学）

呉泰奎（ハンギョレ新聞）

金昌祿（慶北大学）

【第3セッション】 「和解・癒し財団」に何を望むか」

・15時55分～17時25分 司会 外村大（東京大学）

・パネリスト

臼杵敬子（日本の戦後責任をハッキリさせる会）

花房俊雄（「慰安婦問題」に取り組む福岡ネットワーク）

吉澤文寿（新潟国際情報大学）

朴喆熙（ソウル大学）

韓恵仁（成均館大学）

鄭在貞（ソウル市立大学）

南相九（東北アジア歴史財団）

【第3セッション 総括】

・17時25分～18時25分 司会 木宮正史

第1・第2セッション登壇者全員

【閉会辞】

◆ 프로그램 ◆ (한국어)

한일 국제 심포지엄 「정부간 합의 이후의 위안부문제」

【일시】 2016년 7월 31일 (일) 13시~18시 30분

【장소】 도쿄대학 고마바캠퍼스 (교약학부)

21KOMCEE-West лек처 홀

【언어】 한일동시통역

【후원】 한국학 중앙연구원

【무료】 사전등록 불요

【주최】 도쿄대학 글로벌 지역연구기구 아시아지역연구센터

한국학연구부문

【취지】

2015년 말, 위안부문제에 관한 한일정부간합의가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일 양방에서 이를 무효화하려는 적지않은 역학이 작용하고 있어,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간합의를 둘러싼 해석이 양극으로 나뉘어, 합의 후의 문제가 해결을 향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 또한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합의는 최종결착이며, 완전히 결착지어졌으므로, 앞으로 일절 이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라는 주장이 있다. 한편으로, 「당사자나 그 지원운동측이 요구한 『법적 책임』도, 이에 기초한 『배상』도 인정되지 않는 불충분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무효다」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쿄대학 한국학연구부문은, 위안부합의와 이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 이를 일도양단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부간합의에 혼을 담아 살려내어갈 것인가를 과제로 본심포지엄을 기획하였다. 연구와 활동분야, 또 입장과 생각이 다른 전문가가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통해,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일보를 내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심포지엄은, 서로가 한 곳에 모여 의견을 들으며 이해하는 것을 통해 의견의 차를 메우고,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관계 및 한국연구를 전공하는 교내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내외의 많은 분들의 참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찰함과 동시에 한일관계의 장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 1 세션】 종합 사회 나가사와 유코 長澤裕子(도쿄대학)

· 13 시~13 시 10 분 개회 인사 기미야 다다시 木宮正史(도쿄대학)

· 13 시 10 분~14 시 10 분 기조 보고

이원덕 李元德(국민대학교 재단이사): 「화해· 치유 재단」 설립과 그 방향

와다 하루키 和田春樹(도쿄대학 명예교수):

「한일정부간합의를 완성시키고 개선할 길을 생각하다」

【제 2 세션】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14 시 15 분~15 시 45 분 사회 기미야 다다시

· 패널리스트

와타나베 미나 渡辺美奈

(WAM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WAM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기시 도시미쓰 岸俊光 (마이니치 신문)

하코다 데쓰야 箱田哲也 (아사히 신문)

남기정 南基正 (서울대학교)

오탈규 吳泰奎 (한겨레 신문)

김창록 金昌祿(경북대학교)

【제 3 세션】 「「화해· 치유재단」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 15 시 55 분~17 시 25 분 사회 도노무라 마사루 (東京大学)

· 패널리스트

우스키 게이코 臼杵敬子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모임

日本の戦後責任をハッキリさせる会)

하나부사 도시오花房俊雄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후쿠오카 네트워크

「慰安婦問題」に取り組む福岡ネットワーク)

요시자와 후미토시 吉澤文寿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박철희 朴喆熙 (서울대학교)

한혜인 韓惠仁 (성균관대학교)

정재정 鄭在貞 (서울시립대학교)

남상구 南相九 (동북아시아역사재단)

【제 3 세션 총괄】

· 17 시 25 분 ~ 18 시 25 분 사회 기미야 다다시

제 1 · 제 2 세션 등단자 전원

【폐회사】

【第1セッション】

【主催者の開催辞】（日本語）

木宮正史（東京大学韓国学研究所 部門長）

先日、韓国において「和解・癒やし財団(화해 치유 재단)」が設立され、それに日本政府から10億円の拠出が行われることが決まり、昨年末の政府間合意が具体的に動き出したように思います。もちろん、本日の参加者、聴衆のみなさまの中には、政府間合意自体、不十分なものであるというご指摘もあるかと思えます。具体的に、当事者はもちろん、支援者たちの多くも、合意自体は不当であり、問題解決にはならないと主張しています。また、韓国においては、評価する人よりも評価しない人の方が多いという世論調査結果も出ています。確かに、日本政府の法的責任とそれに基づく賠償を求めるという従来からの主張を前提とすると、この合意は不十分なものと言わざるを得ないという主張はもったもな事だと理解できます。

他方で、日本社会の状況を考えると、それほど楽観的にばかりは考えられないというのも正直なところですが。日本社会の中には、慰安婦問題自体を、韓国の反日世論の動員手段に過ぎないとみる向きも多いように思います。韓国社会は、日本を批判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この問題を取り上げるのであって、それ自体が目的になっている。したがって、この問題で何の配慮をしようが受け入れられることはないだろう。したがって、何かを配慮しようとする事自体が無駄であるし、むしろ、変な期待を抱かせるだけなので、何もしない方がよいという主張にもなりかねません。確かに、元慰安婦の方たちには大変申し訳ないことをしてしまったという気持ちを持っている。しかし、それはそれとして、それを材料に、日本人全体があたかも「不道德な人間の集まり」であるかのように攻撃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そうした受け止め方をしている人が、現在の日本社会には実は多いのではないかと想像します。もちろん、それこそ「被害妄想」なのかもしれません。何も、そこまでは言っていないとおっしゃ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ただ、なぜ、日本社会が、この問題に対して、人権問題として真摯に考えようとはしないという意味で「鈍感」なのか。また別の意味で、国家の名誉を傷つけられているという被害者意識では「敏感」なのかを理解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こで誤解のないように申し上げますが、そうした日本社会の反応を指摘することは、それが正当であると主張することでは全くありません。むしろ、

正反対です。そうした理解を試みることによって、そうした認識のどこに問題があるのか、そして、それにどのように働きかけるのか、そうした戦略を考えることが可能となります。私は、この問題に関する、同じような知的作業を、韓国の研究者、運動家を含む有識者の方にも、日本に対して、そして韓国においても、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これも、誤解のないように申し上げておきますと、韓国社会も反省しろ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いるのでは決してありません。そうではなく、日韓社会双方の、そうした自省的な姿勢こそが、この問題に関する前向きな取り組み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のかと確信するからです。

最近、よく耳にするようになった「歴史戦」つまり「歴史戦争」という見方があります。歴史認識をめぐるどちらの方が正しいのかを競い合う、それを二国間関係のみならず、国際社会に向けて競い合うという意味です。最近の日韓関係を振り返ると、歴史戦を戦おうとする「勇ましい人たち」が日韓ともに増え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特に、近年は、日韓関係が少なくとも日本から見ると垂直的な関係から水平的な関係に変容してきたことを受けて、日本も「負けてはならない」というように考える人たちが増え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私は「歴史戦」という発想、それ自体を否定す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国家間に対立争点がある場合、その争点をめぐって相互の立場を主張し合い、どちらの方が説得力を持つのかを競い合うということは必要だと思います。

しかし、少なくとも、慰安婦問題に関しては、日韓の「歴史戦」は「停戦協定」を締結するべき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私は、昨年末の日韓政府間合意は、少なくとも「停戦協定」ではなかったかと思っています。なぜ、「歴史戦」を停戦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のか。それは、当事者の元慰安婦ハルモニたちが高齢であり、限られた時間の中で可視的な成果を収めない限りは、問題がほぼ半永久化されてしまうからです。この問題の半永久化は、誰にとってもプラスにはならないと考えるからです。私は、この問題を私たちの記憶にずっととどめておくことは必要だと思いますが、それをめぐる関係悪化という連鎖の悪循環には、一旦終止符を打つべきだと考えます。そのためには、この「停戦協定」に基づいて、それを「平和協定」に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考えます。残念ながら、朝鮮戦争に関しては「停戦協定」に基づく停戦体制がすでに60年以上持続し、平和協定は依然として締結されていません。そもそも、協定の当事者が誰であるのかという点について相互に異なる主張が依然として展開されています。私は、この問題に関する「停戦協定」に基づき、「平和協定」へと進む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その意味で、昨年末の合意は問題の終わりではなく、問題の始まりとして位置づけるべきだと私は考えます。

そのためには、良好な日韓関係がどうしても必要になってきます。ところが、「歴史戦」の中に問題が位置づけられることによって、むしろ、慰安婦問題が日韓の緊張を高めることに帰結しているのが現状です。問題解決のためには、日韓が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にもかかわらず、この問題が存在するためにそうした協力が難しくなっている、そうした状況が目の前には展開されてきたと言え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もちろん、本日の基調報告やそれに続くセッションの議論では、依然として停戦協定自体を認められないという議論も出てくることは十分に予想されます。私は、この停戦協定が最善だとは思っていません。それを補完修正する必要があるとも思います。そのうえで、本日の会議では、これだけの日韓の知性が集まったわけですから、何とか知恵を集めて、この停戦協定を平和協定へと進化させるために、何が必要なかを考える場にしたいと、主催者としては考えております。

私は、映画「記憶を生きる」で披瀝された、ハルモニたちの一言一言、一挙手一投足が胸につきさりました。また「鬼郷 (귀향)」を見て、この映画をご覧になった韓国の方々、もしくはそれ以外の方々が何を考えるのかを想像しました。そうしたうえで、何としても、停戦協定を平和協定へと進化させたいという気持ちをより一層強くしました。また、私は、つかこうへいの演劇が大好きでよく見ていますが、そこでも、この問題は取り上げられています。そうした作品の中には、問題に取り組むうえで、貴重な示唆を与えてくれているようなものもありました。

国籍が異なる、加害者と被害者という立場が異なる、そうした違いがある限りは、結局理解し合えないのでしょうか。諦め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もちろん、それほど容易ではないと思いますが、お互いに共感し合い議論する共通の土俵を作ることくらいは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私事で恐縮ですが、1980年代後半、韓国が激動する中、三年半韓国に留学した私にとって、韓国社会は、深いふところ私を暖かく迎え、研究者として育ててくれました。私も、韓国社会の激しくもありながら、知的な誠実さに触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れからほぼ4半世紀が経過して、韓国社会は自由で民主的な世界に変わり、日韓関係も大きく変わりました。もちろん、それが日韓間の問題をより一層難しくしているという側面はあると思います。にもかかわらず、その時の状況と比べれば、現在の方が、自由で闊達な議論をお互いに行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意味で、条件はもっとよくなっているはずで、本日の会議が、「知的な諦め」を確認する場ではなく、「知的な挑戦」の場になることを願

って、主催者の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どうか、一日、知的に誠実な議論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주최자의 개회사】 (한국어)

기미야 다다시(도쿄대학교 한국학연구부문 부문장)

이번에 한국에서 <화해 치유 재단>이 설립되고 거기에 일본정부가 10 억 엔을 거출하는 것이 결정되어 작년말 정부간 합의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참가자, 청중 여러분 중에는 정부간 합의 자체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는 물론 많은 지원자 분들도 합의자체가 부당하고 문제해결이 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평가하는 사람보다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세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본정부의 법적책임과 그에 바탕한 배상을 요구하는 종래 주장을 전제로 한다면 이 합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이해됩니다.

한편 일본 사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소감입니다. 일본사회 안에는 위안부 문제 자체를 한국의 반일세론 동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는 일본을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어떤

배려를 해도 받아들일 것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뭔가 배려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일이며 오히려 기대를 품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을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을 재료로 일본인 전체가 마치 불도덕적인 인간들이 모인 것처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현재 일본사회에는 실은 많지 않을까 상상됩니다. 물론 그것이야말로 “피해망상” 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다만, 왜 일본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인권문제로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다는 의미로 “둔감” 한 것일까. 또 다른 의미로 국가의 명예를 훼손되고 있다는 피해자의식으로는 “둔감” 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본사회의 반응을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런 이해를 시도하는 것을 통해 그런 인식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전략을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한 비슷한 지적작업을 한국의 연구자, 운동가를 포함한 분들도 일본에 대해 그리고 한국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점도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자면 한국사회도 반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일사회 양측의 그러한 자성적인 자세야말로 이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해결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자주 듣게 된 “역사전” 즉 “역사전쟁”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어느 쪽이 바른가를 경쟁하고 그것을 이국간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해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한일관계를 돌이켜보니 역사를 싸우겠다고 하는 용맹한 사람이 한일 양국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년에는 한일관계가 적어도 일본에서 보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용돼 온 것을 보고 일본도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역사전”이라는 발상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간에 대립, 쟁점이 있을 경우, 그 쟁점을 둘러싸고 서로 입장을 주장하고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을 가지는지를 경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 “역사전”은 “정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말 한일정부간 합의는 적어도 “정전협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 “역사전”을

정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령이시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는 한, 문제가 반영구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반영구화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들 기억에 남길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관계악화라는 연쇄의 악순환에는 일단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정전협정”에 바탕하여 그것을 “평화협정”으로 발전시킬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전쟁에 관해서는 “정전협정”에 바탕을 둔 정전체제가 이미 60년 이상 지속되고 평화협정은 여전히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협정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여전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작년말 합의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양호한 한일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사전” 안에 문제가 자리하는 것으로 오히려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의 긴장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하는 상황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일이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서 전개돼 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기초보고나 그에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여전히 정전협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논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저는 이 정전협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회의에서는 이렇게 한일의 지성이 모였으니까 지혜를 모아서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진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할 자리로 하려고 주최자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 ” ” 기억” 과 산다” 에서 피력된 한머니들의 한마디한마디와 일거수일투족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귀향” 을 보고 이 영화를 보신 한국 분들이나 그 이외 분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상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진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층 더 강하게 가졌습니다. 또한 저는 쓰카 고헤이 연극을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거기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 중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귀중한 시사를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입장이 다른 그런 차이점이 있는 한, 결국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서로 공감하여 의논하는 공통의 자리를 만들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송구하지만

1980년대 후반 한국이 격동하는 시기에 3년반 유학했습니다. 한국사회는 깊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고 저를 연구자로 길러줬습니다. 저도 한국사회의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으로 성실한 점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벌써 4반세기가 지나서 한국사회는 자유롭고 민주적 세계로 변하고 한일관계도 크게 변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일간의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상황과 비교하면 현재가 자유롭고 활발한 의논을 서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조건이 더 나아졌을 겁니다. 오늘 회의가 “지적 체념”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적 도전”의 자리가 될 것을 바라며 주최자 인사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부디 오늘하루 지적으로 성실한 의논을 부탁드립니다.

번역: 하시모토 시게루 (도쿄대학교 한국학연구부문 특임 연구원)

【基調報告】

慰安婦合意と「和解・癒し財団」の事業推進方向(日本語)

李元徳（国民大学）

1. 慰安婦妥結（2015年12月28日）に至るまでの経緯

一慰安婦問題は、1991年の金学順女史の告白以来、韓日両政府、国連などの国際社会、市民社会が問題解決のためにそれぞれ努力してきたが、解決することのできなかつた歴史的、女性人権、外交的問題であり、巨大な爆発性と揮発性を内在した難題中の難題。

一河野談話の発表およびアジア女性基金の事業実施など、日本による解決のための努力もなされたとはいえ、依然として限界をもっており被害者と韓国国民のこれに対する不満と批判が高かった。

一2011年8月に憲法裁判所が、慰安婦問題に対する解決の努力を怠ったことは「不作為の違憲」とであると判示して以来、韓国外交部は慰安婦解決のための強力な対日外交を推進。李明博大統領が2012年の京都首脳会談で慰安婦問題の解決を強力に追求するなど対日外交の最大懸念になってきた。

一2013年2月、朴槿恵政府の開始以来、慰安婦問題の解決を対日外交の最重要課題として掲げて日本側に解決を要求、強力な対日圧迫展開（国際社会、韓米、韓中など主要首脳外交、3・1節、8・15光復節祝辞などで反復して言及）。

一2014年4月、ハーグ韓米日首脳会談以来、12回の韓日外交部局長級協議、8回の外交長官会議を開催して、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交渉を集中して展開した。

一2015年11月2日、ソウルで開催された韓中日首脳会談を契機に開かれた韓日首脳会談において、可能な限り早期に慰安婦問題妥結のための協議を加速化することに合意し、韓日国交正常化50周年である2015年の内に妥結を図ることにしたことが妥結の推進力として作用した。

一こうした状況下で、李丙琪・青瓦台秘書室長と谷内正太郎・国家安全保障会議事務局長との電撃的な秘密交渉を通じて最終的な妥結を図る。

一2015年12月28日、韓日外交長官会談と共同記者会見発表によって慰安婦問題に対する両国の妥結合意公表。

2. 慰安婦合意（2015. 12. 28）内容に対する評価

（1）慰安婦問題がもつ複合的で重層的な性格

—韓日両国の外交懸案

—普遍的な次元の戦時女性人権問題と連関したグローバルイシュー

—教訓として記憶して後世に教育しなければならない歴史的事実

—被害者個人の尊厳と名誉回復

(2) 進展した合意と評価

—慰安婦問題解決の本質は、被害者の女性としての尊厳と名誉を回復して傷を癒すことにある。このために要求される核心要素は、1) 日本政府の加害責任認定、2) 日本政府の公式謝罪反省の表明、3) 謝罪の証憑として賠償的措置を実施することにある。

—本質的合意と付随的合意：日本政府の責任認定／謝罪反省の表明／賠償的措置の約束、が合意の本質的部分であるといえる。少女像言及／最終性・不可逆性の表明／国際社会での相互批判・批難自制、という部分は、本質的な合意に伴う付随的な事項を規定したものと理解される（喩えれば胴体と尻尾の関係であり、尻尾が胴体を揺るがすような理解は適当でない）。

—こうした基準に照らしてみると、今回の合意は、1) 日本政府が責任を痛感するという点を公式的に認めたという点、2) 総理大臣が日本政府を代表して謝罪反省を表明、3) 日本政府の予算で賠償的措置を実施するとしたことで、これまでの交渉経緯を考慮すると相当な進展をみせたものと評価できる。

—法的責任を100%認めたとはいえないが、日本政府が責任を認めて謝罪反省を表明した後、その謝罪反省の証拠（後続措置）として政府予算を使用して被害者の尊厳と名誉回復および心の傷を癒すための事業を実施することに合意しただけに、事実上（de facto）の法的な責任を認めたものと解釈できる。

—日本政府が明白な形の法的責任を認めて被害者に対する賠償を支払うことこそ慰安婦問題のもっともすっきりした解決であるという点は明らか。このためにもっとも望ましいのは、日本が慰安婦問題に関する特別法を制定して、この特別法に立脚した賠償措置を履行することである。

—2000年代初めに野党の少数議員によってこうした性格の法律案が提案されたことがあるが、本会議に上程されないまま廃案になってしまった。民主党政権時には、国会上程の試みすらできず。

—現在、日本の政治的状況および国会での議員分布などを考慮すると、特別法制定による賠償は実現不可能な解決案であるという点を勘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したがって、慰安婦交渉で韓国政府は「政府の責任を否定してせいぜいのところ人道主義的次元の支援で慰安婦問題を終結」させようというこれまでの日

本政府の姿勢に圧迫を加えて、なんとしてでも政府の公式的責任認定と賠償的措置を引き出そうと総力を集中させてきたものである。

—今回の合意は、内容的には日本が法的責任を認めたに近いものであると解釈できる。

—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が賛成したアジア連帯会議解決案（2014年6月）ですら、法的責任という用語の代わりに4項目の事実と責任認定、4項目の措置を要求したことに留意する必要がある。

（3）これまでの妥結案との比較

—アジア女性基金（国民基金）が表明した総理の謝罪の手紙、理事長書簡でも道義的責任（政府責任、法的責任ではない）のみに言及した。政府予算ではなく国民の募金額に贖罪金（atonement 償い）支給を試みる。この二つの要素のために、韓国ではこの解決法の受け入れを反対。

—佐々江案（2012年3月）に比べても相当に進んだ案であると評価できる。佐々江案は人道的措置を前提としたもので、日本政府の責任認定が明らかでなかった。

—今回の合意は、斉木案（2012年11月）に似た内容と評価されるが、斉木案と比較してもより進展した内容をもつものと評価される。斉木案は、政府の責任認定、総理の反省表明および駐韓大使の手紙伝達と300万円の金銭支給が要諦であるが、野田総理がこの案を承認しなかったことで事実上白紙化された。

（4）安部政権のこれまでの立場との比較

—安部政権は、歴史修正主義的立場から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アレルギー的反応をみせてきた。慰安婦募集の強制性を否定する一方、河野談話の毀損を図って検証報告書を出すなど超強硬姿勢。

—訪米（2015年4月）時の人身売買であるという言及、安部談話（2015年8月）での表現に比べると、相当に進んだ立場表明である。自らの明らかな言葉で慰安婦に対する政府の責任認定および謝罪反省の立場を表明したことで、これまでの立場から大きく進展したとみることができる。

—一言で、落第点水準の慰安婦認識をもっていた安部総理から公式的謝罪反省の立場表明をえたことは、それなりの対日外交の成果として評価できる。

3. 妥結に対する批判と議論に対する立場

（1）不十分な疎通と対話

―被害者および支援団体との緊密な事前の意思疎通が十分でなかったという指摘については、政府と財団がこれを謙虚に受け入れて、さらに積極的な疎通と対話を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政府側説明：15回にわたり被害者、支援団体などと協議、対話を進めたとする）。

―朴槿恵政府は、慰安婦解決を図るに際して、被害者が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国民が納得できる解決を主張してきただけに、被害者および支援団体との緊密な意思疎通および対話は必須不可欠な要素である。

（２）拙速妥結ではないのかという問題

―被害者の年齢（平均年齢89.5歳）を考慮すると、慰安婦問題は寸刻を争う時間との戦い。2012年8月現在で80人中34人が亡くなり、妥結日基準で46人しか生存していない。妥結以降の7ヶ月の間に6人が他界し、現在40人のみ生存。

―今回の妥結機会を逃した場合、慰安婦問題は永久に未解決の問題として漂流し、韓日関係は極端な国民感情が介在した対決と摩擦へと進むものと予想される。

―2015年が韓日基本条約50周年であり、この機を逃した場合、慰安婦妥結はさらに難航する可能性が大きかったと予想される。

（３）謝罪反省の真情不足（感性的アプローチの不足）

―総理や外相が慰安婦ハルモニを直接訪問して心から謝罪反省を表明したならば、という心残り（感性的アプローチの不足）

―ドイツのブラント総理、ヴァイツゼッカー大統領の謝罪行動の一場面が与える誠意と感動に比べると、外相の岸田外務大臣の無感情な表情での文章朗読には真情が感じられないことは事実である。普通の韓国国民もこの点については同感である。

―韓日首脳会談開催などの契機に、安倍総理が慰安婦問題に対する明白な謝罪反省を直接表明することを望む。

―被害者に対する金銭の支給時に、総理名義の謝罪書簡を駐韓日本大使など責任ある当局者が被害者の前で朗読したり伝達する方法の検討を望む。

（４）最終的解決、不可逆性言及

―妥結案で最終的解決、不可逆性に言及したことは、両国政府の相手方に対する信頼の不足に起因したものである。

―韓国は、1993年の河野談話にも関わらず、日本の右翼政治家が妄言などの言行によりこれを覆して修正しようという試みが頻繁になされてきたという

点に留意して、今回の合意による最終的解決、不可逆性の意義を解釈している。今回の合意にも関わらず合意文に違反する妄言などの言行為責任ある指導者によってなされたときには、合意が白紙に戻るという警告の意味。

—アジア連帯会議の2014年6月解決案でも、日本の指導者の度重なる妄言などに留意して「覆すことが不可能な」という用語が使用されたことに留意。

—日本は、いわゆる日本国内の「ゴールポスト移動論」に対する対韓国不信世論を意識してこの条項の挿入を韓国に要求したものとみられ、特に安倍総理の強力な要求事項であったと推定される。

—最終的、不可逆的解決という意味は、岸田外相が表明した措置が誠実に履行されるということを前提として、韓日両政府が政府次元の外交交渉議題や争点としてこれ以上慰安婦問題を扱わない（卒業）という意味と解釈される。

—この合意により、被害者の訴訟行為、支援団体や市民社会での真相究明のための調査研究活動、市民団体による記念事業、運動などは、なんら制約を受けないものと解釈される。

—多国籍の民間団体が主導する慰安婦記録ユネスコ登録活動は、決して合意に違反したり抵触するものではない。

—合意がしっかり履行されるという前提のもとに両政府が国連など国際社会でこの問題について相互に批難、批判を自制するという合意も、政府主体の批難・批判行為に限られるものであり、民間団体による女性人権増進のための活動を制約するものではない。

—合意により「韓国が慰安婦問題について轡をかまされた」あるいは「動作停止」措置が取られたとか「日本が免罪符を受けた」などの評価は、あまりに断片的であったり拡大解釈するものであって客観的な事実とは異なる。

（5）少女像問題

—少女像移転問題について韓国政府は合意したことがない。「可能な対応方向について関連団体との協議などを通じて適切に解決されるように努力する」と表明して、これは日本が表明した措置が着実に履行されるという前提下での努力で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

—少女像撤去に対する裏での合意が存在するなどの一部メディア報道は、まったくの事実無根の流言飛語であると韓日両政府が確認している。

—少女像は、民間団体が慰安婦問題解決の念願する象徴として建てたものであり、政府がどうこう言える事柄ではない。

4. 財団設立と事業推進の方向性

（1）和解・癒し財団の船出

—和解・癒し財団は、合意7ヶ月にあたる7月28日に発足（女性家族部傘下の民間非営利財団という形態）し、理事長と理事15人で構成。理事には外交部と女性家族部の主務局長やOB、歴史学、法律、韓日外交の専門家およびジャーナリストなどが参与。

（2）事業推進方向：被害者および支援団体、国民との緊密な疎通と共感
—被害者、支援団体、国民を対象とする緊密な疎通と共感をさらに活性化して、交渉の経緯と合意内容に対する理解を求める努力を真摯に持続して傾注し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

—25年間、慰安婦問題関連の研究調査活動、支援活動、運動に献身してきた研究者および支援団体関係者の苦勞を評価して、彼らが慰安婦問題の解決に参加できるように条件を整えて努力を傾けなければならない。専門家の研究、調査および教育活動は、今後も続け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3）事業の内容（10億円の用途）

—10億円の日本側拠出資金は早期に拠出するものと予想され、その資金は迅速に執行することが望ましい。財団は事業後に解散。

—10億円の資金は、全額が被害者の尊厳と名誉回復、そして心の傷を癒すことにのみ限定して使用されること。財団の行政費用、経常費支出は、韓国政府が予算支援を行う方針である。

—事業の骨格は、被害者（遺族含む）にたいする直接的な金銭支給（事実上の謝罪／賠償金）と、追悼と記念のための象徴的な事業（例：慰霊碑建立）に大別されるだろう。

—金銭支給対象は、女性家族部に登録された238人（死亡者は遺族）全員に、一定額の一時金が支給される方向で検討中。

—2015年12月28日基準で46人の生存者には、一時金以外にそれぞれに合った支援を行う方向（例えば、238人の登録者に2000万ウォンの一時金、46人の生存者には支援金8000万ウォン）

—実名確認がなされない匿名の多数被害者と、死亡したすべての被害者のためには、追慕と慰霊そして記憶のための慰霊碑（慰霊塔）建立を検討。

—ただし、慰安婦歴史（資料）記念館の建立と運営は、財団の資金だけでは不可能であるため韓国政府や民間募金などの資金で推進することが現実的と展望される。

（4）合意文の補完および進化措置

—合意文を両国外交長官の共同記者会見で発表するだけでは不十分な部分が存在。合意文を修正補完して、政府の最高指導者が相互に署名した文書で合意を完結することが望ましい。

—今年での韓中日首脳会談を契機に韓日首脳会談が開催されるならば、韓日首脳宣言文(共同声明)などで12・28合意を公式化、安部総理の肉声で歴史的事実と政府の責任認定、謝罪反省を表明することを期待。

(5) 今後の課題

—歴史記念館は、財団解散以降にも慰安婦に関連する歴史的真相究明のための研究、調査活動、被害者に対する慰霊および追慕事業、慰安婦問題を初めとした戦時女性人権運動、後世に対する教育活動など諸般の活動を展開できる組織として持続することを希望する。

—慰安婦問題は、韓日関係に限られたイシューではない。韓国を初めとしたアジア諸国および中国、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オランダなどさまざまな国に被害者が分布しているだけに、慰霊碑および歴史記念館はこれらすべての慰安婦被害者を追悼して記憶する施設になることが望ましい。

—歴史記念館は、事業と活動の地平を拡大して国籍を超えたすべての慰安婦被害者のためのグローバルな普遍規範とし、女性人権の進行のための施設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ことが望ましい。

翻訳：橋本繁（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韓国学研究部門・特任研究員）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 재단>의 사업추진 방향(한국어)

이원덕(국민대학교)

1. 위안부 타결(2015년 12월28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김학순 여사의 고백 이래 한일 양 정부, 유엔 등 국제 사회, 시민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매듭을 짓지 못했던 역사적, 여성인권, 외교적 문제로서 엄청난 폭발성과 휘발성을 내재한 난제 중의 난제.

- 고노담화 발표 및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실시 등 일본 나름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피해자들과 한국국민의 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높았음.

- 2011년 8월 현재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방치한 것은 ‘부작위 위헌’으로 판시한 이래 한국 외교부는 위안부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일 외교 추진. 이명박 대통령 2012년 교토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강력 촉구하는 등 대일외교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왔음.

-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위안부 문제 해결을 대일 외교의 최상위 아젠다로 내걸고 일 측에 해결을 요구, 강력한 대일 압박 전개(국제사회, 한미, 한중 등 주요 정상외교, 3.1절 /8.15 광복적 경축사 등에서 반복적으

로 언급)

- 2014년 4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 이래 12차례의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 8차례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위안부 문제해결 위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음.

- 2015, 11, 02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할 것에 합의하였고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 중 타결을 꾀하기로 한 것이 타결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였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병기 청와대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간의 전격적인 비밀협상을 통해 최종적인 타결을 꾀함.

- 2015년 12월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과 공동기자회견 발표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타결합의 공표.

2. 위안부 합의(2015, 12, 28) 내용에 대한 평가

(1) 위안부 문제가 지닌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성격

- 한일 양국의 외교현안

- 보편적인 차원의 전시 여성인권 문제와 연관된 글로벌 이슈

- 교훈으로 기억하고 후세에 교육해야 할 역사적 사실

-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

(2) 진전된 합의로 평가

-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피해자의 여성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있음. 이를 위해 요구되는 핵심요소는 1)일본정부의 가해 책임 인정 2) 일본정부의 공식사죄 반성의 표명 3)사죄의 징표로서 배상적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있음.

- 본질적 합의와 부수적 합의: 일본정부의 책임인정/사죄반성 표명/배상적 조치 약속이 합의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소녀상 언급/최종성-불가역성 표명/국제사회에서의 상호비판 비난 자제 부분은 본질적 합의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비유하자면 몸통과 꼬리 관계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과 같은 식의 이해는 곤란함)

-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합의는 1)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 2) 총리 대신이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사죄반성을 표명 3) 일본정부 예산으로 배상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므로 그간의 협상 경위를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법적 책임을 100% 인정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하

고 사죄반성을 표명한 후 그 사죄반성의 징표(후속조치)로서 정부예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에 합의한 만큼 사실상(de facto)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일본 정부가 명백한 형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지불 하는 것이야말로 위안부 문제의 가장 속 시원한 해결이라는 점은 분명함. 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특별법에 입각한 배상 조치를 이행하는 것임.

- 2000년대 초반에 야당의 소수 의원들에 의해 이러한 성격의 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지만 본 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안이 되고 말았음. 민주당 정권 시에는 국회상정 시도조차 못함.

- 현재 일본의 정치적 상황 및 지형, 국회에서의 의원 분포 등을 고려하면 특별 법 제정에 의한 배상은 그 실현이 불가능한 해결 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안부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기껏해야 인도 주의적 차원의 지원으로 위안부 문제를 종결” 시키려는 기존의 일본정부 자세에 압박을 가해 어떻게 해서라도 정부의 공식적 책임인정과 배상적 조치를 끌어 내려고 총력을 집중시켜 왔던 것임.

- 이번 합의는 내용적으로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에 근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정대협이 찬성한 아시아연대 회의 해결안(2014, 6)에서조차 법적 책임이라는 용어 대신 4개항의 사실과 책임인정, 4개항의 조치를 요구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기존의 타결 안과의 비교

- 아시아 여성기금(국민기금)이 표명한 총리의 사죄편지, 이사장 서한에도 도의적 책임(정부책임, 법적 책임이 아닌)만을 언급했음. 정부예산이 아닌 국민의 모금액으로 속죄금(atonement : 츠구나이) 지급을 시도.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해법 수용을 반대.

- 사사에 안(2012, 3)에 비교해도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사사에 안에서는 인도적 조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이 불분명했음.

- 이번 합의내용은 사이키 안(2012, 11)에 근접한 내용으로 평가되나 사이키 안과 비교해도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사이키 안은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의 반성표명 및 주한 대사의 편지전달과 300만 엔의 금전 지급이 요체이나 노다 총리가 이 안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백

지화되었음.

(4) 아베 정권의 기존 입장과의 비교

- 아베 정권은 역사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여 왔음.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한편, 고노 담화의 훼손을 피하고자 검증보고서를 내는 등 초강경 자세.

- 방미(2015, 4) 시의 인신매매라는 언급, 아베 담화(2015, 8)에서의 표현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입장 표명임. 자신의 분명한 언어로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사죄반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전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마디로 낙제점 수준의 위안부 인식을 지닌 아베 총리로부터 공식적 사죄반성 입장 표명을 얻어낸 것은 나름의 대일외교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3. 타결에 대한 비판과 논란에 대한 입장

(1) 불충분한 소통과 대화

-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과의 긴밀한 사전 교감, 소통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재단이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욱 적극적인

소통 과 대화를 추진해야 함. (정부 측 설명: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지원단체 등과 협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함)

-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해결을 피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주장해 온 만큼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대화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2) 졸속 타결이 아닌가의 문제

- 피해자들의 연령(평균연령 89.5세) 을 고려할 때 위안부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시간과의 싸움. 2012년8월 현재 80분에서 34분 돌아가서 타결일 기준으로 46명만이 생존해 계심. 타결이후 7개월간 6명이 타계하여 현재 40명만이 생존.

- 이번 타결 기회 놓쳤을 경우, 위안부 문제는 영구 미해결의 문제로 표류하고 한일관계는 극단적인 국민감정이 개재된 대결과 마찰로 치달게 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이 한일기본조약 50주년으로 이 모멘텀을 놓칠 경우 위안부 타결은 더욱 난항할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예상됨.

(3) 사죄반성의 진정성 부족(감성적 어프로치의 부족)

- 총리나 외상이 위안부 할머니를 직접 방문하여 진심으로 사죄반성을 표명

했으면 하는 아쉬움. (감성적 어프로치의 부족)

- 독일의 브란트 총리, 폰 바이츠제커 대통령의 진정한 사죄행동 한 장면이 주는 진정성과 감동을 비추어볼 때 기시다 외상의 무덤덤한 표정의 문장 낭독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임. 보통의 한국 국민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감임.

-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의 계기에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백한 사죄 반성의 직접 표명이 있기를 바람.

- 피해자에 대한 금전지급 시 총리명의로의 사죄서한을 주한일본대사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피해자 앞에서 낭독하거나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하길 바람.

(4) 최종적 해결, 불가역성 언급

- 타결안에서 최종적 해결, 불가역성을 언급한 것은 양국 정부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임.

- 한국은 일본이 1993년 고노담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망언 등의 언행으로 이를 뒤집고 번복하고 수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자행되어 왔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번 합의의 의한 최종적 해결, 불가역성의 의의를 해석하고 있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을 위반하는 망언 등의 언행이 책임 있는 지도자에 의해 행해졌을 시에는 합의가 백지로 돌아간

다는 경고의 의미.

- 아시아연대회의의 2014년6월 해결안에도 일본 지도자들의 거듭된 망언 등에 유의하여 ‘번복 불가능한’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유의.

- 일본은 이른바 일본국내의 ‘골대 변경론’에 대한 대한민국 불신 여론을 의식하여 이 조항의 삽입을 한국에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베 총리의 강력한 요구사항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의미는 기시다 외상이 표명한 조치가 성실하게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일 양정부가 정부 차원의 외교교섭의 제나 쟁점으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졸업)는 의미로 해석됨.

- 이 합의에 의해 피해자의 소송행위, 지원 단체나 시민사회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시민단체에 의한 기념사업, 운동 등에는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다국적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활동은 결코 합의 위반이나 저촉이 될 수 없음.

- 합의가 잘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양 정부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는 합의 또한 정부 주체의 비난 비판행위에 국한될 뿐 민간단체에 의한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제약하는 것

은 아 님.

- 합의로 인해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재갈을 물렸다’ 혹은 ‘동작 그만’ 조치가 취해졌다거나 ‘일본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식의 평가는 너무 단편적이거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객관적 사실과는 다름.

(5) 소녀상 문제

-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합의한 바가 없음.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표명했고 이는 일본이 표명한 조치가 착실하게 이행된다는 전제 하에서의 노력임은 말 할 나위도 없음.
-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이면합의 존재 등의 일부 미디어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라고 한일 양정부가 확인한 바 있음.
- 소녀상은 민간단체가 위안부 문제해결을 염원하는 상징으로 세운 것이므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4. 재단 설립과 사업 추진의 방향성

(1) 화해치유 재단의 출범

- 화해치유 재단은 합의 7개월 만인 7월28일 발족 (여성가족부 산하의 민간 비영리 재단의 형태)하였고 이사장과 이사 15인으로 구성. 이사진에는 외교

부와 여성가족부의 주무국장과 OB, 역사학, 법률, 한일외교의 전문가 및 저널 리스트 등이 참여.

(2) 사업추진 방향: 피해자 및 지원 단체,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공감

- 피해자, 지원 단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밀한 소통과 공감을 더욱 활성화하여 교섭의 경위와 합의내용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진지하고도 꾸준히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임.

- 25년간 위안부 문제관련 연구조사 활동, 지원활동, 운동에 헌신해왔던 연구자 및 지원 단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이 분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전문가들의 연구, 조사 및 교육 활동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3) 사업의 내용 (10억 엔의 용처)

- 10억 엔의 일본 측 거출자금은 조기 거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자금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재단은 사업 후 해산.

- 10억 엔의 자금은 전액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만 한정하여 사용될 것임. 재단의 행정비용, 경상비 지출은 한국정부가 예산지원을 행할 방침임.

- 사업의 골격은 피해자(유족포함)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지급(사실상의 사

죄/배상금)과 추도와 기념을 위한 상징적인 사업(예: 위령비 건립)으로 대별될 것임.

- 금전 지급 대상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38명(사망자는 유족) 전원으로, 일정액의 일시금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검토 중.

- 2015년 12월 28일 기준으로 46분의 생존자들에게는 일시금 외에 맞춤형 지원을 행하는 방향. (예컨대 238명의 등록자에게 2000만원 일시금, 46분의 생존자들에게는 맞춤형 지원금 8000만원)

- 실명 확인이 안 되는 익명의 다수피해자와 사망한 모든 피해자를 위해서는 추모와 위령, 그리고 기억을 위한 위령비(위령탑) 건립을 검토함.

- 다만, 위안부 역사(자료) 기념관의 건립과 운영은 재단의 자금만으로는 불가능 하므로 한국정부나 민간 모금 등의 자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전망됨.

(4) 합의문의 보완 및 진화 조치

- 합의문의 양국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만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 합의문을 수정 보완하여 정부의 최고지도자가 상호 서명한 문서로 합의를 완결 짓는 것이 바람직함.

- 올해 일본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일 정상 선언문(공동성명) 등으로 12/28 합의를 공식화, 아베 총리의 육성으로 역사적 사실과 정부의 책임인정, 사죄 반성을 표명하길 기대함.

(5) 향후 과제

- 역사기념관은 재단해산 이후에도 위안부 관련한 역사적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 조사 활동, 피해자에 대한 위령 및 추모사업,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시여성 인권 운동, 후세에 대한 교육활동 등 제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지속되는 것을 희망함.

-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에 한정된 이슈가 아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제국 및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 피해자가 분포해 있는 만큼 위령비 및 역사기념관은 이들 모든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시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역사기념관은 사업과 활동의 지평을 확대하여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글로벌한 보편규범으로서 여성인권의 진흥을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 되는 것이 바람직함.

日韓政府合意を完成させ改善する道を考える(日本語)

和田春樹(東京大学名誉教授)

1 慰安婦問題はここで解決されねばならない

日本国家は近代において朝鮮を力によって併合し、36年間植民地として支配した。

このことに対して日本の政府、国民は反省し、謝罪する立場に立つことによって、朝鮮の南北の人々と人間的な共生・協力の関係をつくり、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だから、日本国民にとって、植民地支配の過去を反省し、謝罪することは永遠の課題である。

慰安婦問題は、日本と韓国の歴史問題の中でもっとも大きな問題として意識され、両国民はその解決に努力してきた。金学順ハルモニがカミングアウトして以来、25年にわたる運動はいまや最後の局面を迎え、ここで解決にいたらなければならない。被害者ハルモニの中には、ご自身がみなこの世を去っても、新しい世代が意思をうけついで、正しい解決がえられるときまで、闘争をつづけてほしいと願う方もおられるようであるが、ご自分の闘いはご自分の時代で決着をつけなければ、歴史を前進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ある。そのことは、過去25年、カミングアウトした被害者ハルモニの課題であるとともに、問題の解決のために力をつくしてきたすべての人々の義務である。解決ということが相対的、歴史的な、過渡的なものであることはみな理解している。

2 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運動の25年

あらためて、過去25年の運動の推移をふり返って、考えてみよう。この歴史を私は三つのラウンドに分けて考えてきたが、大きく見れば、アジア女性基金期と韓国憲法裁判判決期の二つに区分できる。

慰安婦問題が韓国と日本の社会的関心の中心に登場したのは、1990年10月韓国女性8団体が日韓政府に公開書簡を出し、慰安婦問題6項目要求を提起したときである。翌月挺対協がスタートした。決定的なのは、1991年8月の金学順ハルモニのカミングアウト、記者会見であった。日本政府は韓国盧泰愚政権の促しをうけて、慰安婦問題の調査を開始し、1993年には河野官房長官談話を出し、慰安婦認識を確立し、謝罪した。その謝罪を表す方式として、村山自社連立政権が1995年7月アジア女性基金を設立し、慰安婦問題に対する謝罪と償い（atonement, 贖罪 sokje）の事業を開始した。しかし、償い金に政府の資金を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民間の募金だけでまかなうとした基金の基本コンセプトに対して、韓国の被害者の多くと運動体、日本の運動体が反対し、基金構想撤回、アジア女性基金の事業中止を要求した。挺対協は責任者処罰などを加えた7項目要求を掲げ、法的責任をみとめ、法的賠償を支払えと主張した。

基金は事業を実施する時点では、政府資金による医療福祉支援をも事業の内容にくわえ、韓国と台湾ではこれは現金で一括支給されたので、償い事業の内容は政府から300万円、国民募金から200万円、あわせて500万円の支給となっていた。しかし、被害者全員に国民募金から200万円の償い金を支払うとすれば、韓国、台湾、フィリピンだけでも、支払うことはできず、政府資金を加えなければ不可能であることが事業開始時にはわかっていた。基本コンセプトは破産しており、修正が必要であったのに、それはなされないままに事業はすすめられたのである。

結果として、アジア女性基金はフィリピン211人、オランダ79人にはatonement事業を一通り実施しえたが、韓国では60人、台湾では13人と登録被害者の3分の1程度にしか事業を実施しえずに終わった。和解の方向に前進できなかった。2007年基金は事業を終えて、解散した。

この第一ラウンドの時期、アジア女性基金の時期には、韓国の被害者、運動団体が要求を出し、日本政府がそれに応えて、アジア女性基金という解決案を出したが、拒絶されて終わったのであった。韓国の被害者、運動団体は17年運動したが、日本政府の案を改善することも、別の案にとりかえさせ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

第二ラウンドは2009年日本で民主党政権誕生したところからはじまった。実は第一ラウンドで、日本の運動団体の中からアジア女性基金に反対するところから、立法解決を求める動きがはじまっていた。「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案」が2000年から参議院に野党民主党、共産党、社民党議員によって提案されていた。政府による謝罪をおこない、「名誉等の回復に資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とし、

その措置には、「被害者に対する金銭の支払いを含むものとする」とした法案である。日韓条約時の協定で国家補償はできないという立場を参議院法制局はおろさないで、このように道義的責任の線で支払いがなされることにされたのである。挺対協は法的責任論に固執していたが、日本の運動体が支持することと法律にもとづく支払いであるということで賛成したといわれている。つまり、こんどは日本の運動団体、野党勢力が主体となって、道義的責任論に立って、日本の国会に立法解決をもとめたのである。韓国の被害者も、運動団体もこれに支持をあたえた。しかし、自民党が多数を占める日本の国会はこの動きにこたえず、法案は2002年に2度委員会審議が行われただけで、継続審議廃案の運命を繰り返した。

ところが、2009年にいたり、法案提出の中心になっていた野党民主党が選挙で勝利し、立法解決案の推進者であった鳩山由紀夫氏が総理になるという新事態が生じたのである。日本の運動体は、「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全国行動2010」に団結し、立法解決をもとめる運動を本格的に開始した。しかし、民主党鳩山政権は要望に応じず、法案提出議員千葉景子、岡崎トミ子氏らは入閣したが、立法のために動かず、ついに立法解決は不可能となった。全国行動2010の絶望は深かったと考えられる。

この事態の中で2011年8月韓国憲法裁判所が、慰安婦問題での韓国政府の不作为を憲法違反と判決した。これが「天の助け」となったのである。ここに置いて、韓国政府がはじめて慰安婦問題の解決を日本政府に求めるあたらしい対抗の構図が出現することになった。第二ラウンドを民主党政権期と考えれば、その途中ではあったが、新しい考えでは、第二期、韓国憲法裁判所判決期のはじまりだといえる。

もとより挺対協は運動をつづけ。同年12月水曜デモは1000回に達し、挺対協は少女像を大使館前に設置した。数日後の日韓首脳会談で李明博大統領は野田首相に慰安婦問題解決の強硬な申し入れをおこなった。野田首相は「知恵を出す」と辛うじて回答した。この事態の中で、2012年2月、「全国行動2010」は花房俊雄共同代表の名で、政府間協議での政治決断による解決をもとめ、①被害者の心に響く謝罪、②政府資金による「償い金」の支給、③人道支援という考えの拒絶、の3項目を提案した。これが、斎藤勁官房副長官に伝えられ、12月28日李大統領の特使李東官大使との間で解決案合意にいたった。①日韓首脳会談で合意し、合意内容を首脳会談コミュニケで発表する。②首相のあたらしい謝罪文では、「道義的」という言葉を冠さず、「責任を認める」と表現する、③駐韓大使が首相の謝罪文と国費からの謝罪金を被害者に届ける、④第三次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を立ち上げて、そこに慰安婦問題小委員会をつくり、日韓共同で慰安婦問題の真相究明にあたる。この合意案は李大統領は

承認したが、野田首相は拒否し、そのまま流れてしまった。民主党政権は総選挙で敗北し、退陣した。

2012年末、民主党政権に代わって、自民党安倍晋三第二次政権が誕生した。歴史修正主義者の安倍氏は、河野談話、村山談話の再検証を主張して総裁選挙に勝利したので、総理になった直後からその方針を明言していた。慰安婦問題の解決はまったく不可能となり、反動の到来が覚悟された。しかし、安倍政権のこの方針に対する米国の批判は最初から厳しかった。そして、2013年3月東北アジア初の女性元首朴槿恵大統領が就任するや、慰安婦被害者のために解決をもとめる方針を明確にし、ついには安倍首相が考えを変えない限り、日韓首脳会談を拒否するとして、正面から圧力をかけはじめた。このため日本の歴史修正主義勢力は朴槿恵大統領に対する個人攻撃の週刊誌キャンペーンを組織し、日韓関係は極度に険悪化した。米国オバマ大統領が介入し、政権のリベラル派ブレーンからの説得もあったのであろう。2014年3月14日安倍首相は、ついに河野談話継承を明言するにいたった。

3ヶ月後の6月、第12回アジア連帯会議が慰安婦問題解決の提案を採択した。これは日本の全国行動と韓国挺対協の共同提案に基づくものであった。①河野談話の継承発展に基づく解決、②日本政府の責任をみとめた謝罪、加害事実の承認(軍の慰安所で意に反して慰安婦・性奴隷にされた、人権抑圧であるなど)、③翻すことのできない方法で謝罪を表明すること、④謝罪の証としての賠償、⑤真相究明と再発防止。このような内容で朴槿恵大統領と安倍首相が合意して、解決してほしいという提案である。法的責任、法的謝罪、責任者処罰という言葉はここにはまったくない。「謝罪の証としての賠償」ということは政府資金による支払いということの意味するにすぎない。

和田はこの提案を知ると、そのときからこの提案の宣伝家となり、日本の外務省には8、9月の段階で伝えている。韓国でも、これを伝え、講演で話し、論文にかき、本にも書いた。2015年4月安倍訪米の前夜、東京で全国行動の集会があり、私は尹美香氏とともに登壇して、この提案を解説した。安倍氏は訪米して、慰安婦の動員に人身売買がおこなわれたと発言した。そのあとから、韓国側との秘密交渉がはじまったと考えられる。秘密交渉は、谷地正太郎国家安全保障会議事務局長と李炳琪大統領秘書室長の間でおこなわれたようだ。安倍首相は自らの支持勢力である歴史修正主義派のことを考えて、謝罪に基づく新しい解決にながく踏み切れなかったようにみえる。しかし、昨年11月谷地、李2氏が同席したソウルの日韓首脳会談で、両首脳は慰安婦問題の早期妥結で合意した。

12月28日、奇襲攻撃的に日韓外相会談で合意がなされ、発表された。この合意について、韓国でも、日本でもいろいろな議論がある。しかし、私は、こ

の合意を考えるに当たって、過去25年間の事態の推移を考慮するなら、二つのことを前提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第一は、慰安婦問題の解決は、日韓両政府の交渉にゆだねら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国と国の交渉では最終的には外交的な判断が大きな意味をもつことは避けられない。これまで運動し、考え、討論してきた人々はそのことを覚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出来上がった合意に対しては、これを前提として、未完成の部分は完成をもとめ、問題のある部分は改善をもとめていくというふうに批判するのが現実的である。

第二は、運動団体は、政府間の交渉に対して、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には、政府間の合意にあたって尊重されるべき要望事項を2回にわたり提起した。一つは2012年2月の日本の「全国行動2010」の決定に基づく花房提案であり、いまひとつは韓日の運動団体の合意にもとづく2014年6月の第12回アジア連帯会議提案である。昨年12月の合意を評価するにあたって被害者の側にたつ運動団体が依拠すべき検証の枠組みは、この二つの提案である。つまり、1990年の挺対協6項目要求、のち責任者処罰が加わった7項目要求はもはや検証の枠組みにはなりえない。

3 日韓合意の内容

12月日韓両政府の合意の核心は、慰安婦問題にかんする日本の総理大臣の謝罪とそれにもとづく一〇億円の拠出である。まず謝罪は、岸田外相の発表によって、次のように表明された。

「慰安婦問題は、当時の軍の関与の下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る。安倍内閣総理大臣は、日本国の総理大臣として、改めて慰安婦として、数多の苦痛を経験され、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全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のおわ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する。」

これは河野談話の結論部分を基本的に繰り返すと同時に、「日本政府の責任」をみとめるという言葉をつけ加えている。当然に謝罪の前提は河野談話に述べられた慰安婦認識である。さらにこのたびの謝罪は、アジア女性基金の事業実施のさいに出された橋本首相の謝罪の手紙の主文を繰り返している。「道義的責任」という言葉を「日本政府の責任」に変えている。当然に、首相の謝罪の手紙と同時に被害者に渡された基金理事長原文兵衛の手紙にのべられた慰安婦認識を前提にしている。そこにはこう書かれていた。「かつて戦争の時代に、旧日本軍の関与のもと、多数の慰安所が開設され、そこに多くの女性が集められ、将兵に対する『慰安婦』にさせられました。一六、一七歳の少女もふくまれる若い女性たちが、そうとも知らされずに集められたり、占領下では直接強制的な手段が用いられることもありました。貴女はそのような犠牲者のお一人だと

うかがっています。これは、まことに女性の根源的な尊厳を踏みにじる残酷な行為でありました。」

この謝罪の表明を2012年2月の花房提案がもとめた「被害者の心に響く謝罪」に照らして見ると、謝罪の内容ではなく、「代読謝罪」などと言われた謝罪の形式が問題だということがわかる。12月の合意は、総理の謝罪の事実を韓国政府と米国政府に通知し、ひろく一般にはできるかぎり目立たなくさせるため、12月末の年末休みに実行して、官邸のホームページにはのせない、のち国会でも総理の言葉ではくりかえさないというようなお粗末な発表形式をとったものである。謝罪の言葉は被害者ハルモニにこそ向け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先の文言を紙に書き、総理の署名を入れて、日本大使館前の水曜デモの人々に示し、駐韓大使が被害者ハルモニのところに届けることが必要である。

また謝罪の言葉を2014年6月のアジア連帯会議提案に照らして見ると、謝罪の前提となる慰安婦認識がまったく含まれていない。しかし、すでに述べたように、このたびの謝罪は河野談話とアジア女性基金の慰安婦認識を前提としている。問題は、その前提の認識をはっきりと認めることが追加され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このたびの合意では、「日本政府の予算により、全ての元慰安婦の方々の心の傷を癒す措置を講ずる」と明示され、具体的には、「韓国政府が、元慰安婦の方々の支援を目的とした財団を設立し、これに日本政府の予算で資金を一括で拠出し、日韓両政府が協力し、全ての元慰安婦の方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心の傷の癒やしのための事業を行うこととする」こととなっている。

7月28日に発足した「和解・治癒財団」は、当然ながら、生存している被害者ハルモニに対して、謝罪の証としての金銭的な支払いをおこなうものと思われる。被害者に金銭的な支払いがなされるとすれば、その趣旨を説明するためには、日本国首相の謝罪の手紙を添える必要がある。日本政府が被害者に対して謝罪の証として支払うものだとすれば、日本政府とアジア女性基金が過去において実施した償い事業（贖罪事業）の実績を勘案することも必要になるかもしれない。もちろん死亡した被害者の遺族にも謝罪の証を出すことも意味あることであろう。

しかし、亡くなった被害者ハルモニのためなら、被害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心の傷の治癒（癒し）のための事業」の第二の内容として、財団がこの世を去った被害者ハルモニのための慰霊碑の建設を進めることがふさわしい。

慰霊碑の建設は、1990年挺対協6項目要求の中に挙げられていた。1998年金大中大統領の就任以後、アジア女性基金と金大中政府との交渉の中で慰霊碑の建設が話題にのぼったことがある。韓国の駐日大使より、アジア女性基金は一時金支給を転換し、慰霊碑、記念館の建設など歴史の教訓とする事業

に変更して欲しいとの要望があった。アジア女性基金側は慰霊碑の建設について検討を開始したが、意見がまとまらず、断念せざるをえなかった。その後慰霊碑問題は消えるにいった。

そこでいう慰霊碑は日本政府が日本の地に建てるものであるが、今日の状況では、日本に慰安婦慰霊碑を建てる条件は存在しない。まことに遺憾ながらヘイトスピーチ・デモがおこなわれている目下の状況では、慰霊碑を建て、守っていく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だから、このたびの日韓合意を最終的な解決として、両国民の記憶にとどめるためにするのであれば、日本の政府の参加をえて、韓国の和解財団がソウルに慰霊碑を建てるのがのぞましい。

慰霊碑には、韓国政府の責任でまとめられた日韓政府が到達した慰安婦認識を記載して、慰安婦問題の説明とし、つぎに12月合意とおりに、安倍総理の謝罪の言葉を記載し、最後に朴槿恵大統領の死者ハルモニへの慰霊と日韓の和解を願う言葉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冒頭の慰安婦認識のパートには、アジア連帯会議の4項目を最大限もりこむように文章に配慮すれば、慰霊碑建設に対する支持を広げ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ところで、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最終的な解決をいうのであれば、慰安婦問題に関する歴史的研究を完成し、それをもって人々の歴史的認識を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

慰安婦問題の資料調査、真相究明は1991年韓国の盧泰愚政府の促しをうけて、日韓両政府が同時に開始し、1992年には韓国政府の中間報告書が出て、93年に日本政府の最終報告書と河野談話が出されたのであった。その後95年にアジア女性基金が生まれ、日本側ではさらなる資料の発掘も、研究も進められた。したがって、そのような努力をすべてとりこんで、韓国政府が慰安婦問題の最終報告書を出すことが望まれてきた。2015年には韓国政府女性家族部のもとで専門家グループにより慰安婦問題白書の作成の努力がなされたことを承知している。その作業を完成し、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最終的な研究をとりまとめれば、それに基づいて、慰安婦問題歴史記念館を韓国政府がソウルにつくることが可能になる。

したがって、和解財団が韓国政府からの資金もえて、慰安婦問題歴史記念館の建設にとりくむことは、被害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心の傷の治癒のための事業」の第三の内容としては、ふさわしいものと考えられる。当然ながら、歴史記念館は、国の被害者だけでなく、北朝鮮、台湾、フィリピン、中国、インドネシア、オランダ、マレーシア、東チモール、日本などの被害者についても、その被害事実を確定し、展示する全アジア的、全世界的な慰安婦問題歴史記念館とすることがのぞましい。そのためには、韓国国内の被害者、運動団体、専門家の協力をうけるだけでなく、国外の被害者、運動団体、専門家の協力をも

とめ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くに日本の政府には、河野談話作成にかかわる資料、アジア女性基金の判断と事業にかんする資料の提供をもとめ、さらに吉見義明氏から秦郁彦氏にいたる幅広い日本の専門家の意見を聞き、日本に存在するアクティヴ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などに協力を要請すべきであろう。もちろん日本には、多様な声、多様な意見がある。それらを広く聞き、検討したうえで、妥当な認識を確定させていくのは、被害国韓国の責任である。

한일정부합의를 완성시켜 개선하는 길을 생각하다(한국어)

와다 하루키(和田 春樹)

1 위안부 문제는 여기서 해결되어야 한다.

근대 일본은 조선을 힘으로 병합하고 36 년간 식민지로 삼아 지배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국민들은 반성하고 사죄하는 입장에 섬으로써, 남북한 사람들과 인간적인 공생 · 협력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일본국민에게 있어서 식민지 지배의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은 영원한 과제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문제 중 가장 큰 문제로 의식되어, 양국 국민들은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학순 할머니가 커밍아웃한 이래로 25 년에 걸친 운동이 바야흐로 최후의 국면을 맞이하였고, 여기서 해결의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피해자 할머니들 중에는, 할머니들이 모두 이 세상을 떠나도 새로운 세대가 의사(意思)를 물려 받아 올바른 해결에 다다를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할머니들의 투쟁이 할머니들 본인의 세대에서 결착을 짓지 못하면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

이는 과거 25 년동안 커밍아웃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과제임과 동시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 써온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해결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며 역사적이고, 과도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바이다.

2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25 년의 운동

과거 25 년간의 운동의 추이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도록 하자. 나는 이 역사를 3 개의 라운드로 나누어 생각해왔는데, 좀더 크게 보면 아시아 여성 기금기와 한국 헌법 재판 판결기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사회적 관심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은 1990 년 10 월 한국여성 8 개 단체가 한일 양정부에 공개 서한을 제출해서 위안부 문제 6 항목 요구를 제기했을 때이다. 다음달 정대협이 발족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1991 년 8 월 김학순 할머니의 커밍아웃, 기자회견이었다. 일본정부는 한국 노태우 정권의 요구를 받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1993 년에는 고노 관방장관담화를 발표하여 위안부 인식을 확립하고 사죄했다. 그 사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무라야마 자민당-사회당 연립정권이 1995 년 7 월에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고,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죄와 속죄(atonement, 贖罪 sokje)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속죄금(償

이 金)에 정부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민간모금으로만 마련하여 했던 기금의 기본 콘셉트에 한국의 많은 피해자들과 운동단체, 일본의 운동단체가 반대하여 기금구상의 철회,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중지를 요구했다. 정대협은 책임자처벌 등을 추가한 7 항목의 요구를 내걸고, 법적책임을 인정하라, 법적 배상을 지불하라고 주장하였다.

기금의 경우, 사업 실시 시점에서는 사업 내용에 정부자금의 의료복지지원도 추가되어있어서, 한국과 대만에서는 이것이 현금으로 일괄지급되었기 때문에 속죄사업의 내용은 정부로부터 300 만엔, 국민모금으로부터 200 만엔, 합계 500 만엔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전원에게 국민 모금으로 조달된 200 만엔을 속죄금으로 지불할 경우, 한국, 대만, 필리핀에만 이를 지불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정부자금을 보태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업개시 시점에는 알고 있었다. 기본 콘셉트는 파산하였고, 수정이 필요했는데도 이를 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그 결과 아시아여성기금은 필리핀 211 명, 네덜란드 79 명에 대해 atonement 사업을 일추 실시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60 명, 대만에서는 13 명으로 등록 피해자의 3 분의 1 정도밖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채 끝났다.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2007 년 모금은 사업을 끝내고 해산했다.

이러한 제 1 라운드의 시기, 즉 아시아여성기금의 시기에는 한국의 피해자, 운동단체가 요구를 하고 일본정부가 이에 응답하여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해결책을 냈으나 거절당하여 끝났던 것이었다. 한국의 피해자, 운동단체는 17 년간 운동을 계속했지만, 일본정부의 안을 개선하는 것도, 다른 안으로 바꾸는 것도 하지 못했다.

제 2 라운드는 2009 년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 탄생한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제 1 라운드에서 일본의 운동단체 가운데 아시아여성기금에 반대하던 곳에서부터 입법해결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2000 년부터 참의원에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안’이 야당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정부에서 사죄를 하고, ‘명예 등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며, 그 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는 법안이다. 한일조약 시의 협정으로 국가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참의원 법제국이 철회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도의적 책임의 선에서 지불이 행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정대협은 법적책임론을 고집하고 있었으나, 일본의 운동단체가 지지하는 것과 법률에 기초한 지불이라는 점에서 찬성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즉, 이번에는 일본의 운동단체, 야당세력이 주체가 되어 도의적 책임론에 입각하여 일본 국회에

입법해결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의 피해자도, 운동단체도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자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일본 국회는 이 움직임에 응하지 않았고, 법안은 2002 년에 위원회 심의가 2 번 행해졌을 뿐, 계속 심의 폐안의 운명을 반복했다.

그러나 2009 년이 되어, 법안 제출의 중심이 되었던 야당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하고 입법해결안의 추진자였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가 총리가 되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의 운동단체는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2010’으로 집결하여 입법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법안제출의원 지바 게이코(千葉景子), 오카자키 도미코(岡崎トミ子)등이 입각했으나 입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며, 결국 입법해결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국행동 2010 의 절망은 깊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태가 전개되는 가운데 2011 년 8 월 한국헌법재판소가 위안부문제에 있어 한국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것이 ‘하늘의 도움’이 되었다. 이로부터 한국정부가 처음으로 위안부문제 해결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새로운 대항 구조가 출현하게 되었다. 제

2 라운드를 민주당 정권기라고 생각하면, 그 도중이었기는 했지만, 새롭게 생각해보면 제 2기, 한국헌법재판소 판결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대협은 운동을 계속하였다. 같은해 12월 수요일 집회는 1000회에 달하였으며, 정대협은 소녀상을 대사관 앞에 설치했다. 며칠 후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수상에게 위안부문제 해결을 강경히 요구했다. 이에 노다 수상은 '지혜를 내겠다'고 간신히 회답했다. 이러한 사태가 전개되는 가운데 2012년 2월에 '전국행동 2010'은 하나부사 도시오(花房俊雄) 공동대표의 이름으로 정부간 협의를 통한 정치결단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① 피해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사죄, ② 정부자금에 의한 '속죄금'의 지급, ③ 인도지원이라는 생각의 거절, 이 3개항목을 제안했다. 이것이 사이토 쓰요시(齋藤勳) 관방 부장관에게 전달되어, 12월 28일 그와 이대통령의 특사 이동관 대사간에 해결안 합의가 이루어졌다. ①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합의 내용을 정상회담 코뮈니케로 발표한다, ② 수상의 새로운 사죄문에는 '도의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책임을 인정한다'고 표현한다, ③ 주한일본대사가 수상의 사죄문과 국비로 조성한 사죄금을 피해자에게 전한다, ④ 제 3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거기에 위안부문제 소위원회를 만들고, 한일공동으로 위안부문제의 진상규명을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

합의안에 대해 이대통령은 승인했지만, 노다수상이 거부하여 합의안은 그대로 흘러가버렸다. 민주당정권은 총선거에 패배해 퇴진했다.

2012 년말, 민주당 정권이 해야하고 자민당 아베신조(安倍晋三) 제 2 차 정권이 탄생했다. 역사수정주의자인 아베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증을 주장하며 총재선거에서 승리했기에, 총리가 된 직후부터 그 방침을 취할 것을 언명하고 있었다. 위안부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반동적 움직임이 도래할 것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베정권의 방침에 대한 미국의 비판은 처음부터 엄격했다. 그리고 2013 년 3 월 동북아시아 첫 여성원수인 박근혜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해결을 요구하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아베수상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도 거부하겠다고 정면에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세력은 박근혜대통령 개인을 공격하는 주간지 캠페인을 조직하고, 한일관계는 극도로 험악해졌다. 이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개입하여 정권의 리버럴파 브레인의 설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2014 년 3 월 14 일 아베 수상은 고노 담화 계승을 언명하였다.

3 개월 후인 6 월, 제 12 회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위안부 문제해결 제안에 관한 채택이 이루어졌다. 이는 일본의 전국행동과 한국 정대협의 공동제안을

기초로 하는 것이었다. ① 고노 담화의 계승 발전에 기초한 해결, ②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사죄, 가해사실의 승인(군위안소에서 본인의 뜻에 반하여 위안부·성노예가 되었다, 인권탄압이었다 등), ③ 반복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죄를 표명할 것, ④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 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이러한 내용으로 박근혜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합의하여 해결해주길 바란다는 제안이었다. 법적 책임, 법적 사죄, 책임자처벌이라는 말은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이라함은 정부자금에 의한 지불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와다는 이 제안을 알게된 후, 그 때부터 이 제안의 선전가가 되어 일본의 외무성에는 8, 9 월 단계에 전하였다. 한국에서도 이를 전하고 강연을 하고 논문을 썼으며, 책에도 이에 대해 썼다. 2015 년 4 월 아베 방미의 전날 밤, 도쿄에서 전국행동의 집회가 있어, 나는 윤미향(尹美香)씨와 함께 등단하여, 이 제안에 대해 해설했다. 아베는 방미하여 위안부 동원에 인신매매가 행해졌다는 발언을 했다. 그 후부터 한국측과의 비밀교섭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비밀교섭은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수상은 자신의 지지세력인 역사 수정주의파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사죄에 기초한 새로운 해결에 나아갈 것을 오랫동안 결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 11 월 서울, 야치 사무국장과 이병기 실장 두사람이 동석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정상은 위안부문제의 조기타결에 합의했다.

12 월 28 일, 한일외상회의에서 기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발표되었다. 이 합의에 대하여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나는 이 합의를 생각할 때 과거 25 년에 이르는 사태의 추이를 고려한다면, 다음의 2 가지를 전제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로, 위안부문제의 해결은 한일양정부의 교섭에 맡겨졌다는 점이다. 나라와 나라의 교섭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외교적 판단이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운동을 펼치고, 생각하고, 토론해온 사람들은 이를 각오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미완성인 부분은 완성을 목표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을 향해가도록 비판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두번째로, 운동단체는 정부간의 교섭에 대하여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간 합의 시 존중되어야하는 요망사항을 2 회에 걸쳐 제기했다. 그 중 하나는 2012 년 2 월 일본의 '전국행동 2010'의 결정에 기반한 하나부사 제안이며, 또 하나는 한일 운동단체의 합의에 기초한 2014 년 6 월 제 12 회 아시아연대회의 제안이다. 피해자 측에 서는 운동단체가 작년 12 월에 이루어진 합의를 평가할 때에는 이 두가지 제안에 의거하여 검증해야한다.

즉, 1990 년 정대협 6 항목 요구, 후일 책임자 처벌이 추가된 7 항목 요구는 이제 검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3 한일합의의 내용

12 월 한일 양정부간 합의의 핵심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총리대신의 사죄와 이에 기초한 10 억원의 거출에 있다. 우선 사죄의 경우, 기시다 외상의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표명되었다.

‘위안부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이는 고노담화의 결론부분을 기본적으로 반복함과 동시에,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당연히 사죄의 전제는 고노담화에서 언급된 위안부 인식이다. 더욱이 이 때의 사죄는,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실시 때 제출된 하시모토 수상의 사죄편지의 주문(主文)을 반복하고 있다.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일본정부의 책임’으로

바꾸었다. 당연히, 수상의 사죄편지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전달된, 기금 이사장 하라분베에(原文兵衛)의 편지에 쓰여진 위안부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과거 전쟁의 시대에 구일본군의 관여 하, 다수의 위안소가 개설되었고, 거기에 많은 여성들이 모아져 장병에 대한 "위안부"가 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16, 17 세 소녀마저 포함된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알지 못한채 모아지거나, 점령하에서는 직접 강제적인 수단이 이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이러한 희생자의 한사람이라 들었습니다. 이는 실로 여성의 근원적인 존엄을 짓밟는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이 사죄 표명을 2012 년 2 월 하나부사 제안이 요구한 '피해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사죄'에 비추어 보면, 사죄의 내용이 아니라 '대독사죄(代誦謝罪)'등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죄형식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월 합의는 총리의 사죄사실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 통지하고, 널리 일반 시민의 눈에는 되도록 띄지 않게하기 위해, 12 월 말의 연말휴일에 실행하고 총리관저 홈페이지에는 게재하지 않을 것, 후일 국회에서도 총리의 말로는 반복하지 않는다는 번번치 못한 발표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사죄의 말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향해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한 문언을 종이에 쓰고,

총리의 서명을 넣어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한일본대사가 피해자 할머니들께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죄의 말을 2014년 6월 아시아연대회의 제안에 비추어 보면, 사죄의 전제가 되는 위안부인식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말한것 처럼 이 때의 사죄는 고노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의 위안부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전제가 되는 인식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모든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겪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한일 양국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다.

7월 28일에 발족한 <평화·치유재단>은 당연하게도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죄의 증거로서 금전적인 지불을 실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지불이 행해진다고 하면, 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국 수상의 사죄 편지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증거로서 이를 지불한다고 한다면, 일본정부와

아시아여성기금이 과거에 실시한 속죄사업의 실적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해질지 모른다. 물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의 증거를 보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를 치유(癒し)하기 위한 사업'의 제 2의 내용으로 재단이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위령비의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위령비의 건설은 1990년 정대협 6항목 요구에 포함되어 있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아시아여성기금과 김대중 정부와의 교섭 중에 위령비 건설이 화제로서 거론되었던 적이 있다. 한국의 주일대사로부터, 아시아여성기금은 일시금 지급을 전환하여, 위령비, 기념관의 건설 등 역사적 교훈을 주는 사업으로 변경해주었으면 한다는 요망이 있었다. 아시아여성기금 측은 위령비의 건설을 검토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단념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위령비 문제는 사라졌다.

여기서 말하는 위령비는 일본정부가 일본 땅에 세우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 일본에 위안부 위령비를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헤이트 스피치·협한시위가 행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위령비를 건설하고 이를 지켜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한일합의를 최종적인 해결로 양국민의 기억에 새기려면, 일본정부도 참가하여 한국의 화해재단이 서울에 위령비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령비에는 한국정부의 책임으로 결정된 한일정부가 도달한 위안부 인식을 기재하여 그것을 위안부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12 월의 합의 대로, 아베총리의 사죄의 말을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위령과 한일 화해를 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모두(冒頭)의 위안부인식 파트에 써 넣을 문장에 아시아연대회의의 4 항목을 최대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위령비 건설에 대한 지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에 대해 말해보자면, 위안부문제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완성시키고, 이를 가지고 사람들의 역사적 인식을 높여 나가야만 한다.

위안부 문제의 자료조사, 진상규명은 1991 년 한국의 노태우 정부의 압력을 받아 한일 양국정부가 동시에 개시하여, 1992 년에 한국정부의 중간보고서가 제출되고 93 년에는 일본정부의 최종보고서와 고노 담화가 제출되었다. 그 후 95 년에 아시아여성기금이 탄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더 많은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노력을 한데 모아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대되어 왔다. 2015년에는 한국정부 여성가족부 하 전문가 그룹이 위안부 백서를 작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작업을 완성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연구를 집대성한다면, 이에 기초하여 한국정부가 서울에 위안부문제 역사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화해재단이 한국정부로부터도 자금을 받아 위안부문제역사기념관의 건설에 착수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의 치유를 위한 사업'의 제 3의 내용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역사기념관은, 한국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북한, 대만,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일본 등의 피해자도 대상으로 하여 그 피해사실을 확정하고 전시하는 전아시아적, 전세계적인 위안부문제 역사기념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국내의 피해자, 운동단체, 전문가의 협력 뿐만 아니라, 국외의 피해자, 운동단체, 전문가의 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일본정부에는 고노 담화 작성에 관련된 자료, 아시아여성기금의 판단과 사업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에서 하타 이쿠히코(秦郁彦)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일본에 존재하는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등에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본에는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를 널리 듣고 검토한 후에, 타당한 인식을 확정시켜가는 것은 피해국
한국의 책임이다.

번역 : 이선형(도쿄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한국학연구부문 RA)

교열 : 민동엽(도쿄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第2セッション】

日韓国際シンポジウム「政府間合意以後の慰安婦問題」メモ(日本語)

岸俊光(毎日新聞論説委員)

1. 慰安婦問題と私

2004～05年 東大『慰安婦』問題を通して人間と歴史と社会を考える」ゼミに参加

2007年 大沼保昭教授との共著『慰安婦問題という問い』を出版

2015年 毎日新聞連載『償い』という問い(27回)

2016年 毎日新聞ルポ「元慰安婦 支援事業の現場」

毎日新聞「朝鮮人捕虜 米尋問調書発見」

2. 日本国内の「日韓合意」評価

・合意翌日(2015年12月29日)の在京紙社説見出し

朝日「歴史を越え日韓の前進を」

毎日「日韓の合意を歓迎する」

読売「韓国は『不可逆的解決』を守れ 少女像の撤去も重要な試金石だ」

日経『慰安婦』決着弾みに日韓再構築を」

産経「本当にこれで最終決着か 韓国側の約束履行を注視する」

東京『妥結』の重さを学んだ」

・韓国「和解・癒やし財団」設立翌日(2016年7月29日)の在京紙社説見出し

朝日「緒に就いたにすぎない」

毎日「ようやくここまで来た」

読売 なし

日経「元慰安婦支援の着実な履行を」

産経「韓国が誠意をみせる番だ」(28日)

東京「解決まで日韓は共に」

・世論調査

▽朝日(2016年1月19日)

合意「評価する」63%、「評価しない」19%

軍の関与認定「評価する」60%、「評価しない」23%

韓国がつくる団体への10億円支出「妥当だ」35%、「妥当ではない」49%

合意は日韓関係改善に役立つか「役立つと思う」54%、

「役立つとは思わない」31%

▽毎日(2016年2月1日)

合意「評価する」65%、「評価しない」25%

合意によって問題が「解決するのは難しい」72%、

「解決すると思う」19%

▽読売 (2016年1月11日)

合意「評価する」49%、「評価しない」36%、「答えない」19%

今後、日韓関係は「改善する」50%、「改善しない」38%、「答えない」12%

▽韓国ギャラップ (2016年1月8日)

合意「評価する」26%、「評価しない」54%

合意「再交渉すべきだ」58%、「再交渉すべきでない」28%

少女像「合意内容を日本が履行するかどうかに関係なく

移転すべきでない」72%

「日本が履行すれば移転してもよい」17%

▽日本の言論 NPO と韓国・東アジア研究院 (2016年6~7月)

日本 合意「評価する」47.9%、「評価しない」20.9%

韓国 合意「評価する」28.1%、「評価しない」37.6%

3. 日韓交渉を振り返る

・河野談話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 (1993~2002年)

1993年8月4日 河野洋平官房長官談話。

1995年8月15日 村山富市首相談話。

1997年1月~2002年5月、アジア女性基金が韓国において「償い事業」実施。総理のおわびの手紙には、橋本龍太郎、小淵恵三、森喜朗、小泉純一郎の4首相が署名。

・民主党 (野田佳彦) 政権の交渉 (2011~2012年)

2011年12月18日 野田佳彦首相と李明博大統領が京都で日韓首脳会談。

2012年3月 外務省の佐々江賢一郎次官が訪韓し、「佐々江案」提示。

2012年4月 斎藤勁官房副長官が訪韓し、首相親書を手渡す。

2012年10月 斎藤勁官房副長官と李東官大統領特使が東京で会談。

・安倍晋三政権の交渉 (2013~2015年)

2013年10月16日 産経新聞が河野談話の根拠となった日本政府による元慰安婦女性への聞き取り調査を入手し、ずさんなものだったと報道。

2014年2月27日 毎日新聞が、1996~2002年に3国1地域の被害者に事業を実施した内訳は、韓国60人▽台湾13人▽フィリピン211人▽オランダ79人と報道。02年の時点で韓国政府が認定した元慰安婦は207人で、事業を受け入れた人は3割足らず。また基金の収入の内訳は、「償い金」への募金5億6500万円▽医療・福祉支援用政府拠出金11億2000万円▽事務事業経費等政府補助金35億500万円▽総額51億9000万円。ほぼ9割が政府の支出。

2014年6月2日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 (挺対協) を含むアジア連帯会議が、日本政府及び軍が軍の施設として「慰安所」を立案・設置し、管理・統制したこと、女性たちが本人たちの意に反して「慰安婦・性奴隷」にされたことを認め、日本政府に公式な謝罪、賠償などを求める提言。

2014年6月20日 日本政府が河野談話検証報告「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を公表。

2014年8月5日 朝日新聞が慰安婦報道検証。

2015年8月6日 20世紀を振り返り21世紀の世界秩序と日本の役割を構想するための有識者懇談会（21世紀構想懇談会）が、安倍晋三首相に報告書を提出。

2015年8月14日 戦後70年の安倍首相談話。

2015年12月28日 日韓合意。

2016年7月28日 韓国「和解・癒やし財団」設立

4. 残された課題

- ・「和解・癒やし」財団に魂を入れる。
- ・日本政府による慰安婦被害者への明示的な謝罪はあるか。
- ・少女像の取り扱い。
- ・植民地支配の責任など、過去を受け継ぎ、歴史研究を深める。
- ・アジア女性基金の「失敗」に学べるか。

以上

한일 국제심포지엄 「정부간 합의 이후의 위안부문제」 메모(한국어)

기시 도시미쓰(岸俊光, 마이니치 신문 논설위원)

1. 위안부 문제와 나

2004~05년 도쿄대

「『위안부』 문제를 통해 인간과 역사와 사회를 생각한다

(『慰安婦』問題を通して人間と歴史と社会を考える)」 수업 참가

2007년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교수와의 공저

『위안부 문제라는 물음(慰安婦問題という問い)』을 출판

2015년

마이니치 신문 연재 「『속죄』라는 물음

(『償い』という問い)」(27회)

2016년

마이니치 신문 르포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현장

(元慰安婦 支援事業の現場)」

마이니치 신문 「조선인 체포 미심문조서발견

(朝鮮人捕虜 米尋問調書發見)」

2. 일본국내의 「한일합의」 평가

- 합의 다음날 (2015 년 12 월 29 일) 재(在)도쿄 신문 사설의 표제

아사히 「역사를 넘어 한일의 전진을(歴史を越え日韓の前進を)」

마이니치 「한일합의를 환영한다(日韓の合意を歓迎する)」

요미우리

「한국은 『불가역적해결』 을 지켜라 소녀상의 철거도 중요한 시금석이다

(韓国は 『不可逆的解決』 を守れ 少女像の撤去も重要な試金石だ)」

닛케이

「『위안부』 결착의 추세로 한일재구축을

(『慰安婦』 決着弾みに日韓再構築を)」

산케이

「정말로 이것으로 최종결착인가 한국측의 약속이행을 주시한다

(本当にこれで最終決着か 韓国側の約束履行を注視する)」

도쿄 「『타결』 의 무게를 배웠다(『妥結』 の重さを学んだ)」

· 한국 「화해·치유 재단」 설립 다음날 (2016 년 7 월 29 일) 재 도쿄 신문

사설의 표제

아사히 「시작에 불과하다(緒に就いたにすぎない)」

마이니치 「간신히 여기까지 왔다(ようやくここまで来た)」

요미우리 없음

닛케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착실한 이행을

(元慰安婦支援の着実な履行を)」

산케이

「한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다(韓国が誠意をみせる番だ)」 (28 일)

도쿄 「해결까지 한일은 함께(解決まで日韓は共に)」

· 여론 조사

▽아사히 (2016 년 1 월 19 일)

합의 「평가한다」 63%, 「평가하지 않는다」 19%

군의 관여 인정 「평가한다」 60%, 「평가하지 않는다」 23%

한국이 만드는 단체에 대한 10 억엔 지출

「타당하다」 35%、 「타당하지 않다」 49%

합의는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4%,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1%

▽마이니치 (2016 년 2 월 1 일)

합의 「평가한다」 65%, 「평가하지 않는다」 25%

합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어렵다」 72%,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19%

▽요미우리 (2016 년 1 월 11 일)

합의 「평가한다」 49%. 「평가하지 않는다」 36%, 「대답 없음」 19%

앞으로 한일관계는

「개선」 50%, 「개선되지 않는다」 38%, 「대답 없음」 12%

▽한국 갤럽 (2016 년 1 월 8 일)

합의 「평가한다」 26%, 「평가하지 않는다」 54%

합의 「재교섭을 해야한다」 58%, 「재교섭을 하면 안된다」 28%

소녀상

「합의내용을 일본이 이행하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이전은 안된다」 72%

「일본이 이행하면 이전해도 된다」 17%

▽일본의 언론 NPO 와 한국 · 동아시아 연구원 (2016 년 6 ~ 7 월)

일본 합의 「평가한다」 47.9%、 「평가하지 않는다」 20.9%

한국 합의 「평가한다」 28.1%, 「평가하지 않는다」 37.6%

3. 한일 교섭을 돌아본다

- 고노 담화에서 아시아 여성 기금까지 (1993 ~ 2002 년)

1993 년 8 월 4 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

1995 년 8 월 15 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 담화.

1997 년 1 월 ~ 2002 년 5 월, 아시아 여성기금이 한국에서 「속죄 사업(償い事業)」을 실시. 총리의 사죄 편지에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모리 요시로(森喜朗),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로 구성된 4 명의 수상이 서명.

-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의 교섭 (2011 ~ 2012 년)

2011 년 12 월 18 일 노다 요시히코 수상과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에서 한일정상회담.

2012 년 3 월 외무성의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一郎) 차관이 방한하여, 「사사에 안」을 제시.

2012 년 4 월 사이토 쓰요시(齋藤勲) 관방 부장관이 방한하여 수상 친서를 전달.

2012 년 10 월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과 이동관 대통령 특사가
도쿄에서 회담.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교섭 (2013 ~ 2015 년)

2013 년 10 월 16 일 산케이 신문이 고노 담화의 근거가 된 일본정부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 여성에 대한 청취보고서를 입수하여, 부실한 보고서였다고
보도.

2014 년 2 월 27 일 마이니치 신문이 1996 ~ 2002 년에 3 국 1 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사업 실시 내역에 대해 한국 60 명▽대만 13 명

▽필리핀 211 명▽네덜란드 79 명

이라고 보도. 02 년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피해자는 207 명

으로, 사업을 받아들인 사람은 3 할에 미치지 못함.

또한 기금의 수입 내역은, 「속죄금(償い金)」 모금 5 억 6500 만엔

▽의료· 복지지원용 정부거출금 11 억 2000 만엔▽사무 사업 경비등 정부

보조금 35 억 500 만엔▽총액 51 억 9000 만엔. 약 9 할이 정부 지출.

2014 년 6 월 2 일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대협)을 포함한 아시아

연대 회의가 일본정부 및 군이 군 시설로써 「위안소」를 입안· 설치하고,

관리· 통제했던 점,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 성노예」가

되었던 점을 인정하고, 일본정부에 공식적인 사죄, 배상 등을 요구하는 제언을 행함.

2014년 6월 20일 일본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 보고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협의 경위~고노 담화 작성부터 아시아 여성 기금까지~」를 공표.

2014년 8월 5일 아사히 신문이 위안부 보도를 검증.

2015년 8월 6일 20세기를 돌아보며 21세기 세계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기위한 전문가 간담회(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아베 신조 수상에게 보고서를 제출.

2015년 8월 14일 아베수상, 전후 70년 담화.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

2016년 7월 28일 한국 「화해·치유 재단」 설립

4. 남겨진 과제

- 「화해·치유」 재단에 혼을 불어넣기.
- 일본 정부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인 사죄는 존재하는가.
- 소녀상 문제.
- 식민지 지배의 책임 등, 과거를 물려받아 역사연구의 깊이를 더한다.

· 아시아 여성 기금의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상.

번역 : 이선형 (도쿄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한국학연구부문 RA)

慰安婦問題に関する外相合意について考える(日本語)

南基正 (ソウル大学日本研究所)

私は外相合意の直後、日本の『朝日新聞』と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媒体の『デイリー韓国』に意見を要求され、私の考えを表明する機会を得ました。

このインタビューとコラムで、私は基本的に合意の意義を肯定的に評価しました。それまでの外交交渉の経緯からみて、これを外交当局者たちの交渉の結果としてみると、そのような評価が可能であるという立場でした。

それは「アジア女性基金や佐々江案より進歩した内容が入っているから」であり、具体的には「日本が軍の関与を認め、政府の責任を痛感し、総理が公式に

謝罪と反省を表明し、日本政府の予算措置で慰安婦の女性たちのための事業が実施されるという内容の合意」であるからでした。(デイリー韓国)

しかし、合意への「批判もありうる」として「ハルモニたちや両国の支援団体が要求してきた内容からみると物足りないものであり、その程度の合意がなぜ今になって出てきたのかという批判」が可能であると指摘しました。特に「法的責任を確認できず、最終的解決の言質を与え」たうえ、「日本政府が少女像を問題視したのは残念」であったと評価しました。(デイリー韓国、朝日新聞) 従って、「韓国政府は、このような批判を真摯に受け入れ、被害当事者のハルモニたちや支援団体への誠実な説明と細心の配慮が必要」であると要望しました。(デイリー韓国)

その上、この合意の背景には「歴代韓国政府の一貫した努力があったという事実」があり、その意味で外相合意は「朴槿恵政権だけの作品でも責任でもない」と指摘しました。(朝日新聞、デイリー韓国) さらに重要なことは、「アジア女性基金以降、このような発展が、原則を曲げず忍苦の歳月を耐えてきたハルモニたちと支援団体、そして関連した研究者たちの刻苦の努力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ことを忘れてはいけない」し、「この全ては民主化以後に成長した市民社会の力量に支えられたものである」と主張しました。「民主化以後、市民社会の力量が慰安婦問題を通じて噴出したのは、我が民族が嘗めてきた辛酸の歴史が慰安婦問題に集約されていたから」であったと思いました。(デイリー韓国)

もっとも残念だったのは、合意に法的責任という文句を入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ですが、これについては、支援団体から「日本政府が具体的な加害の事実を認めて謝罪するなら、法的責任を実質的に認めたとみなすことが可能」であるとの考え方が示された経緯もあり、外相合意は、従来日本政府がこだわってきた道義的責任ということばから道義的という修飾語を取り外すことによって、妥結に至ったと理解を示しました。(デイリー韓国)

最後には、期待のことばを述べました。外相合意の内容を着実に実施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梗塞状況にあった日韓関係が正常化し、慰安婦問題を乗り切ったことによって日韓関係が成熟した関係に入れば、日韓両国は新しい分野での協力もさらに進めていく可能性が生まれ、日韓関係は重層化・多面化するだろう、そして「国交正常化 50 年の年を東アジアにおける安定と繁栄の共同体構築のための新しい出発の年と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と期待を込めて書きました。

これが、外相合意に接した私の感想でした。この考えは、今も、概ね変わりません。しかし、外相合意を取り巻くその後の韓国の状況は、非常に厳しい展開を見せています。合意の実施のため財団を立ち上げたつい最近の状況でも、無効化と廃棄を主張する批判の声は収まりません。私は、合意を批判する方々の

考えに対して、そのような考え方は十分成り立つものであると認めます。特に、合意の文言に対する原則的な立場からの批判については、そう見ることも可能と同意できます。従って、そうした部分が合意実施の過程で十分考慮され、改善されるべきであると考えます。

しかし、「無効化・廃棄」の主張には意見を同じに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原則から考えてもそうであり、情勢から考えてもそうでもあります。原則から考えるとは、この合意が、外相合意という形式による国家間の約束によってなされたという点を考えるということであり、これを軽く見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私個人の支持如何にかかわらず、国民の支持率如何にかかわらず、この政府は、選挙により選出された共和制民主主義の政府であること、従って、その合意は、私を代表して政府が行ったことであるので、それを否定することは、民主主義を否定し、私を否定す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からであります。

だからといって批判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これまた民主主義の原則から考えて批判も可能であります。批判の声をあげて、「無効化・廃棄」に追い込むことも不可能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それは日本政府が「無効化・廃棄」に同意するときには可能です。ここで、情勢から考えることが必要になります。今、日本においてこの合意に批判的な考えをもっている人たちには、一部において、「法的責任」が不明確であるという、合意の不足している点を重視している人たちもいますが、他方においては、日本政府が譲歩しすぎたと批判する人たちもいます。そして、確認できる数字はありませんが、後者の方が前者より多数であると判断されます。それに加えて、今の日本の政治情勢から考えて、「無効化・廃棄」になった後、この問題に「今よりマシな」ものになると期待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これは敗北主義と違います。強いて言うなら、「ベースキャンプ論」です。頂上登頂の前に、しっかり「ベースキャンプ」を確保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いう認識です。逆に、「無効化・廃棄」になった後、外交当局者の合意として具体的な成果を出せずに時間が過ぎてしまう場合、ハルモニたちの忍耐の歳月はどう報われるのでしょうか。金メダルじゃないからといって、銀メダル、または銅メダル、あるいは銅メダルでもなく、傷のついた木のメダルだとしても、これを放り投げてしまい、成果として残すことがなにもないということになれば、それまで流した汗はどこで報われるのでしょうか。玉砕して名誉を守るということでもいいのでしょうか。そして、そうなったとき、一番喜ぶのはどのような人たちでしょうか。

最後に、慰安婦問題を外交交渉の問題から思想の問題に変えて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最近ジャック・デリダの『世紀と容赦 (Le Siecle et le Pardon、韓国語版)』を読みました。それにはデリダの「容赦について」の思想が述べら

れています。デリダの思想は、逆説に満ちていて理解するのが簡単ではありませんが、次の叙述は、この問題を深く掘り下げて考えるための鍵のように思えます。「容赦の概念は（中略）容赦不可能なものがあるという事実から出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事実上、それこそが容赦しなければならない唯一の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中略）もし容赦が可能に見えるもの、カトリック教会が軽微な罪と呼ぶものだけを容赦する構えなら、その時は容赦という観念自体がなくなるでしょう。もし、容赦しなければならない何かがあるなら、それは宗教的言語で人々が「大罪と呼ぶもの、最悪のもの、容赦できない犯罪や過誤なのでしょう」と、デリダは言っています。容赦することのできない対象にしか、容赦という概念は成立しないという逆説は、論理的には理解不可能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が、それを実際に成し遂げることは簡単ではありません。私の理解不足かもしれませんが、デリダは「容赦の不可能性」をいいながら、容赦という心の働きが、思想の跳躍、ひいては宗教的覚醒にも似たなにかを伴う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日本は、慰安婦問題という、過去において犯した「ヒューマニズムに反する犯罪」に対して、「法的責任」を明確にさせなかったことによって、「容赦不可能」な相手になりました。デリダの考え方によれば、ここに来て初めて「容赦」の概念が成立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えます。これを容赦することは思想の跳躍と覚醒を要求することです。外相合意以後を生きながら、慰安婦問題の最終的解決に取り組もうとする我々に今要求されているのはこのことかも知れません。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생각하다(한국어)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저는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한국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한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양측에 제 생각을 표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¹.

이 인터뷰와 칼럼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합의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때까지의 경위로 보아, 이를 외교 당국자들 간 교섭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이 합의에 '아시아 여성기금이나 사사에안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일본이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며, 총리가 공식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으며, 일본 정부의 예산조치로 위안부 피해자 여성분들을 위한 사업이 실시된다는 합의'였기 때문이었습니다.(데일리한국)

그러나 합의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합의가 '할머니들과 한일 양국의 지원 단체가 요구해왔던 것에 비하면

¹ 「慰安婦問題日韓合意、識者に聞く」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 지식인에게 묻다], 『아사히 신문』 2015년 12월 29일 ; 「위안부 합의의 성과와 과제」, 『데일리한국』 2015년 12월 29일.

모자란 것이고, 그러한 수준의 합의가 겨우 이제야 이루어졌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적책임은 확인하지 못한 채 최종적 해결의 언질을 주'었으며, '일본정부가 소녀상을 문제시한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데일리한국, 아사히 신문)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지원 단체에 대한 성실한 설명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환기했습니다. (데일리한국)

또한, 이 합의의 배경에는 '역대 한국정부의 일관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존재하며, 그러한 의미로 이번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단독 작품도 책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데일리한국) 더욱 중요한 것은, '아시아여성기금 이후 이러한 발전이 원칙을 잃지 않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들, 그리고 연구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일구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 모든 것들은 민주화 이후 성장한 시민사회의 역량에 뒷받침된 것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역량이 위안부 문제를 통해 분출했던 것은, 위안부 문제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일리한국)

더욱 아쉬운 것은 합의에 법적책임이라는 문구를 넣지 못했던 점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지원단체로부터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면 법적책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이 표명된 경위도 있었기에, 종래 일본 정부가 고집해 온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에서 도의적이라는 수식어를 제거함으로써 합의가 타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일리한국)

마지막에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합의 내용을 착실히 시행해 감으로써 경색되어 있는 한일관계가 정상화하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해 한일관계가 성숙한 관계에 진입하면, 새로운 분야에서 한일양국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고 한일관계가 중층화 · 다면화될 것이며, '국교정상화 50 주년의 해를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해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담아 썼습니다.

이것이 이 합의를 접한 저의 감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를 둘러싼 그 후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험난한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의의 실시를 위한 재단을 설립한 최근 한국의 상황을 보아도, 무효화와 폐기를 주장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를 비판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대하여, 그러한 생각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특히, 합의의 문언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비판의 경우,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합의 실시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효화· 폐기'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거니와, 이 합의가 외상 합의(外相合意)라는 형식을 취한, 국가간의 약속에 의해 행해진 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도 그러하므로 이를 가볍게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지지 여하에 상관없이, 국민의 지지율 여하에 상관없이, 이 정부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화제 민주주의 정부이고, 따라서 그 합의는 나를 대표한 정부가 행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생각했을 때 비판도 가능합니다. 비판의 소리를 높여 '무효화· 폐기'측으로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정부가 '무효화· 폐기'에 동의할 때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현 정세로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발생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 합의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그 일부에 '법적 책임'이 불명확하다고 하여 합의의 부족한 점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 정부가 너무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후자 쪽이 전자보다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지금 일본 정치 정세를 고려했을 때, '무효화· 폐기'가 된 후, 이 문제에 '지금보다 나은'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패배주의와는 다릅니다. 굳이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론'입니다. 정상에 오르기 전에 견실히 '베이스 캠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말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무효화· 폐기'가 된 이후에 외교 당국자 간 합의로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버릴 경우, 할머니들이 겪어오신 인내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금메달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메달, 또는 동메달, 혹은 동메달도 아닌 상처난 나무로 된 메달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던져버리는 바람에 성과로 남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지금까지 흘려왔던 땀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옥쇄하여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과연 관철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하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으로, 위안부문제를 외교교섭의 문제로부터 사상의 문제로 바꾸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 자크 데리다의 『세기와 용서 (Le Siecle et le Pardon、한국어판)』를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데리다의 '용서에 대한' 사상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데리다의 사상은 역설로 넘쳐있어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서술은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생각하기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개념은 ‘용서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야말로 용서해야 하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까? (중략) 만일 용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가톨릭 교회가 경미한 죄라고 부르는 것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그럴 때에는 용서라는 관념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용서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 언어로 사람들이 대죄라고 부르는 것, 최악의 것, 용서할 수 없는 범죄나 과오일 것입니다’라고 데리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대상에만 용서라는 개념이 성립한다는 역설은, 논리적으로 이해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의 이해부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데리다는 ‘용서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라는 마음의 작용이 사상의 도약, 나아가서는 종교적 각성과도 닮은 무언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라는, 과거에 저지른 ‘휴머니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용서 불가능’한 상대가 되었습니다. 데리다의 사고에 따르자면,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용서’의 개념이 성립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용서하는 것은 사상의 도약과 각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외상합의 이후를 살아가면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에 나서려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번역 : 이선형(도쿄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한국학연구부문 RA)

12・28慰安婦合意と韓日関係(日本語)

呉泰奎 (ハンギョレ新聞論説委員室長)

<12・28合意の意義>

—2011年12月、李明博・野田会談の破綻以後、数年間にわたる韓日間の葛藤の核心は慰安婦問題であった。

—したがって、韓日政府間の慰安婦問題を妥結した<12・28合意>は、韓国内の多様な評価には関係なく、公式的な韓日関係転換の重大な起点であると評価できる。すなわち、最近の韓日関係が12・28合意以前と以後に分けられる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

<12・28合意の内容と評価>

—主要内容は周知の通り、

○日本政府の責任痛感

○安部総理の謝罪と反省表明

○韓国政府が創る財団に日本政府が10億円を政府予算から支出することを核心内容としている。

—上記の合意内容とともに付随的に、

○駐韓日本大使館前の少女像の撤去を韓国政府が関連団体と協議を通して適切に解決

○今後、国際社会における慰安婦問題に対する相互批難・批判自制

○合意の「最終的、不可逆的解決」確認を要素とする構造となっている。

—日本政府の責任認定と総理の謝罪および反省の表明、10億円日本政府予算支出の3点からなる合意の骨子は、韓国がこれまで一貫して提起してきた「日本政府の法的責任」という要求に完全に応えるものではないが、これまでに提示された日本の公式提案(2012年3月の佐々江案)より一部発展したものと評価できる。

—しかし、韓国政府が2005年「慰安婦、サハリン同胞、原爆被害者問題は、1965年韓日協定で未解決の問題」とした公式立場、2010年憲法裁判所の不作為違憲判決とは異なる次元の政治的妥協という点で自ら論理的に矛盾。

—したがって、妥結の発展した点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政府の立場変化、論理変化による批判が提起されている。反面、日本は今回の合意を通して、慰安婦問題は1965年韓日協定で完全に妥結したというこれまでの立場から全く後退しなかった。

—こうした点が、日本ではおおよそ12・28合意に満足を表示する世論が多い反面、韓国では慰安婦支援団体、学界など知識人を中心に批判的な意見が多い原因になっているとみる。

—さらに問題となっているのは、合意の本体ではなく、付属書ともいえる少女像の撤去、国際社会の批判自制、最終的・不可逆的解決から出ている。

—日本側から出た少女像の撤去と10億円の予算支出連携説の真偽が問題になっている。韓国の世論は圧倒的に、少女像を撤去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ものであるため、これが実際に予算支出問題と関連して進行する場合、合意自体まで破棄されることもある爆発力があるとみる。

—国際社会での批判自制も、日本側が積極的に「協議の強制性」がないということを経済社会に広報する反面、韓国政府はこれまで行ってきた慰安婦と関連する政府の支援事業と国際広報を自制する消極的姿勢をみせる（例：朴槿恵大統領の2016年三・一節祝辞、尹炳世外交部長官の3月2日ジェノバ国連人権委参加、慰安婦言及自制）これが国内の批判世論を呼び起こしている。

—最終的で不可逆的という表現のうち、「不可逆的」は外交交渉でほとんど使わない単語という点から知識社会で「侮辱的」という評価が多い。不可逆的という用語は、北朝鮮の核をめぐる交渉でアメリカ側が北朝鮮に対して要求した用語と一致するという点で自尊心を傷つける側面がある。

—また、今回の合意は、韓日間の歴史葛藤と国際社会と日本の葛藤を韓国国内の葛藤に縮小する意味がある。

—歴史葛藤が一度に簡単に解決できないという点から、政府間の政治的妥協によって解決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限界を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した点において、朴槿恵政府が慰安婦問題をすべての韓日関係の入り口として高いハードルを設定したことは、非常に誤った政策である。これがむしろアメリカの圧迫などを招いて、今のような不完全な合意に帰結する大きな原因になったとみる。

◎慰安不合意の履行

—政府次元では、慰安婦合意を起点に対日関係を葛藤から協調に方向を変えたので、合意をしっかりと履行することがたいへん重要。

—しかし、先にみたとおり、合意内容の脆弱性、6月28日の財団発足時におきた反発などからすると、合意履行が簡単ではないものと展望される。

一特に、少女像撤去と日本政府予算支出の連携が明らかになり、日本で自己中心的な慰安婦合意に対する解釈が突出して、国際社会での韓日間の対比される慰安婦関連活動が浮き彫りになった場合、韓国政府と韓国国民の間の葛藤・対立がさらに大きくなる可能性がある。また、これが韓日関係にも悪影響を及ぼしうる。総選挙の局面でこの問題がどれだけ争点となるかも、注目される観点である。

翻訳：橋本繁（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韓国学研究部門・特任研究員）

12.28 위안부 합의와 한일관계(한국어)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12·28 합의의 의미>

- 2011 년 12 월 이명박-노다 정상회담 파탄 이후 몇 년 간의 한·일 간의 갈등의 핵심은 위안부 문제였음.
- 따라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를 타결 지은 '12·28 합의'는 한국 안의 다양한 평가에 관계없이 공식적인 한-일 관계 전환의 중대 기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즉, 최근의 한-일 관계가 12·28 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12·28 합의의 내용과 평가>

- 주요 내용은 다 알다시피,
 - @일본정부의 책임 통감
 -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
 - @한국 정부가 만드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 억엔을 정부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위의 합의 내용과 함께 부수적으로
 -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를 한국정부가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
 -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 자제
 - @합의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확인을 요소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죄 및 반성 표명, 10 억엔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의 3 종으로 된 합의의 뼈대는 한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라는 요구에 완전히 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제시되었던 일본의 공식 제안(2012.3 월의 사사에 안)보다 일부 발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 정부가 2005 년 '위안부,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는 1965 년 한-일협정에서 미해결된 과제'라고 한 공식 입장, 2010 년 현재의 부작위 위헌 판결과는 다른 차원의 정치적 타협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논리적인 모순임.

-따라서 타결의 발전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 논리 변화로 인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일본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도 위안부 문제는 1965 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타결되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았음.

-이런 점이 일본에서는 대체로 12·28 합의에 만족을 표시하는 여론이 많은 반면, 한국에선 위안부 지원단체, 학계 등 지식인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합의의 본체가 아니라, 부속서라고도 할 수 있는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의 비난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서 나오고 있음.

-일단 일본 쪽에서 나오는 소녀상 철거와 10 억엔의 예산 출연 연계설의 진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한국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소녀상을 철거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것이 실제로 예산 출연 문제와 연결되어 진행될 경우 합의 자체까지 파기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고 봄.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자제도 일본 쪽이 적극적으로 '합의의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는 반면에,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해왔던 위안부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사업과 국제홍보를 자제하는 소극적이 자세를 보임.(예:박근혜 대통령의 2016 년 삼일절 기념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3 월 2 일 제네바 유엔 인권위 참석, 위안부 언급 자제) 이것이 국내 비판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표현 중 '불가역적'은 외교 협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단어라는 점에서 지식사회에서 '모욕적'이라는 평가가 많음. 불가역적이란 용어는 북핵 협상에서 미국 쪽이 북한에 대해 요구했던 용어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또 이번 합의는 한-일 사이의 역사 갈등과 국제사회와 일본의 갈등을 한국 국내 갈등으로 축소하는 의미가 있음.

-역사 갈등이 단 번에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간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해야 함.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모든 한일관계의 입구로 높게 설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임. 이것이 오히려 미국의 압박 등을 초래해 지금과 같은 불완전한 합의로 귀결되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봄.

@위안부 합의의 이행

-정부 차원에서는 위안부 합의를 기점으로 대일관계를 갈등에서 협조로 방향을 틀었으므로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

-그러나 앞서서도 봤듯이 합의 내용의 취약성, 6월28일 재단 출범 때 일어난 반발 등으로 미뤄볼 때 합의 이행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소녀상 철거와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의 연계가 드러나고, 일본에서 자기중심적인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해석이 돌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일 사이의 대비되는 위안부 관련 활동이 부각될 경우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 간의 갈등·대립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또 이것이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총선 국면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쟁점화할지도 주목할 만한 관점 포인트임

韓日政府の2015日本軍「慰安婦」合意、廃棄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語)

金昌禄 (慶北大学法学専門大学院・教授)

I. はじめに

本日のシンポジウム案内文の趣旨文には、「いかに、政府間合意に魂を込めて活かしていくのか」という課題について考えたいと書いてある。また、基調講演者たちも「完成」させ、「改善」させていこうと主張する。

結論から述べれば、たいへん遺憾ではあるが、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韓日両国政府の2015年12月28日の「合意」(以下、「2015合意」)は、完成させることも改善させることもできず、そのため、活かしていくことのできないものである。「2015合意」は、その根本前提において誤った「合意」なので、日本軍「慰安婦」問題の真の解決はもちろん、韓日関係の未来のためにも廃棄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II. 「2015合意」はそもそも解決策になりえない。

1. 日本軍「慰安婦」問題の核心としての「法的責任」

日本軍「慰安婦」問題の核心は、韓半島をはじめとしたアジア地域の多くの女性を強制的に引っ張って行って「性奴隷」を強要した犯罪に対して日本が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ものである。その責任は、犯罪に対するものである。その責任は、犯罪に対するものであるので法的責任であり、日本という国家が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国家責任である。日本はその責任を尽くすために事実認定、謝罪、賠償、真相究明、慰霊、歴史教育、責任者の処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が、これまで4半世紀の間、重ね重ね確認されてきた常識である。

1980年代末から日本軍「慰安婦」問題を提起した韓国の女性団体が、1990年代初めから自ら立ち上がって被害者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ハルモニたちが、道端で、講演で、法廷で訴えたのが、まさにその法的責任である。1994年の国際法律家委員会報告書、1996年の国連人権委員会クマラスワミ報告書、2000年の国連人権小委員会マクドゥーガル報告書、2001年の「2000年日本軍性奴隷戦犯女性国際法廷」の最終判決文などが重ねて確認したのが、まさにその国家責任である。

基調講演者たちが言及した 2014 年 6 月の第 12 次アジア連帯会議の提言も、まさにその「法的責任」を果たせというものである。たとえ、提言では「法的責任」という単語は登場せず、主要な処罰対象がいなくなった状況であることを考慮して「責任者処罰」という項目が抜けているとはいえ、その日本政府に対する要求のなかには「日本政府および軍」が「当時の様々な国内法・国際法に違反した重大な人権侵害」を犯したという事実と、それに対する責任を認めること、「翻すことのできない明確で公式な方法で謝罪すること」、「謝罪の証として被害者に賠償すること」、「日本政府保有資料の全面公開」と「国内外でのさらなる資料調査」、「追悼事業の実施」、「義務教育課程の教科書への記述を含む学校教育・社会教育の実施」が含まれている。これは、「法的責任」以外の何物でもありえない。

2. 「2015 合意」が“進展”？

基調講演者たちは「2015 合意」で、1) 日本政府が「責任」を痛感するとしたという点、2) 内閣総理大臣がおわ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するとしたという点、3) 日本政府予算で資金（10 億円）を拠出することにしたという点をもって「進展」があったと評価する。

1) しかし、すでに 1995 年に発足した「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以下、「国民基金」）が被害者たちに伝えようとした「おわびの手紙」に、「我が国としては、道義的な責任を痛感しつつ」と書かれている。したがって、進展ではない。もちろん「道義的」という単語は抜けた。しかし、韓日外交長官記者会見の直後に、安倍総理と岸田外相が「法的責任」を認めたものではないと釘を刺した。質問が「道義的責任か、法的責任か」であるので、「法的責任」ではないとすれば「道義的責任」であるほかない。「2015 合意」の「責任」もまた「道義的責任」にすぎず、したがって「進展」はないのである。

2) 内閣総理大臣のおわびと反省も新しいものではない。上記の「おわびの手紙」は、内閣総理大臣名義となっている。さらに「おわびの手紙」には歴代内閣総理大臣の署名が入っているが、「2015 合意」の「おわび」は「代読おわび」である。なんの「進展」があったというのか。

3) 岸田外相は記者会見直後に、10 億円は「賠償金ではない」と釘を刺した。さらに、去る 3 月 17 日の参議院外交防衛委員会では、「償い金」でもない釘を刺した。そうであれば、10 億円はなんなのか？「医療支援」のために日本政府が「国民基金」に出資した 11 億 2 千万円のお金と同様、「法的責任」はもちろん、なんらの責任とも関係のない「人道的な支援金」でしかない。それを「謝

罪の証拠としての賠償」あるいは「賠償的措置」とみるのは、甚だしい誤読である。

4) 2011年、韓国の憲法裁判所決定が「2015合意」を触発したというのは事実である。しかし、「2015合意」は、その決定が出した宿題をまったく解決できなかった。宿題は、「請求権協定」に対する韓日間の解釈上の紛争を解決せよ」というものであった。ところが、「2015合意」以降にも韓日両国政府は、「これまでの立場に変わらない」と言っている。この点でも「進展」はないのである。

3. 「2015合意」は「退歩」である。

これまで検討したように、「2015合意」にはなんら「進展」がない。一方、「退歩」は明確である。「2015合意」には「河野談話」で明確に認められた「強制性」、「河野談話」はもちろん「おわびの手紙」でも宣言されていた「歴史教育」は、完全に排除されている。

2007年3月16日に第1次安倍内閣が「強制連行」を否定する閣議決定をしたという事実を想起しよう。安倍内閣が始まってから、「河野談話」の趣旨を生かして大多数の日本の中学校教科書に記述されていた日本軍「慰安婦」関連記述が完全に消えたという事実を想起しよう。安倍内閣がアメリカなどの歴史教科書で日本軍「慰安婦」関連記述を削除するために組織的に活動したし、今も活動しているという事実を想起しよう。

「2015合意」は、そのすべての事実に対して沈黙している。沈黙はすなわち黙認である。それなのに、「最終的・不可逆的解決」であるという。「そのため」、「2015合意」は明確な「退歩」であるのである。「国民基金」よりも「退歩」したものなのである。

Ⅲ. 「時間がない」？「現実を考慮すると、仕方がない」？

被害者たちが人生の終わりを目前にしているので、「2015合意」を活かさなければならぬのか。1990年代初めに問題が本格化したときから、既に被害者たちは高齢であって時間がなかった。被害者たちは、「国民基金」の「償い金」を時間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拒否した。その後、20年以上、本当に時間が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真の解決」をせよと訴えてきた。それなのに、今になって最初から解決策になりえない「2015合意」を持ち出して、時間がないので受け入れよとせきたてるのが妥当なことなのか。なによりも、その痛ましくつらい長い歳月を過ごしてきた被害者たちに対する礼儀ではない。

日本の現実を考えると、現在としてはこれが最大限であるので、「落第点水準の慰安婦認識をもつ安倍総理から」これだけでも得たのだから「2015合意」を活か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日本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多く考え、その解決のために熱心に努力してきた方たちの言葉であるので、決してその重さが軽いわけではない。しかし、去る4半世紀の歳月の間、全身を捧げて「真の解決」を訴えてきた被害者たちに、彼らの切々たる訴えに応えてきた全世界の市民に、「加害者の状況がこうなので、これでも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せきたてるのが妥当なことなのか。とても残念な話であるが、これは間違いである。

そもそも「2015合意」程度であれば、強いて今の時点で必要でもない。韓国は1993年に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生活安定を支援する法律を制定して、2002年に記念事業までできるように範囲を拡大した。日本政府から10億円の「支援金」を敢えて受け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もなく、「和解・癒し財団」という目的不明の機構を作る必要もない。韓国の法律にしたがって支援と記念事業をすればよいのである。

IV. 歴史に罪を残さないために一緒に「戦争」に出よう—結びに代えて

「主催者開催辞」で言及されたように、日本軍「慰安婦」問題は「歴史戦争」の場である。しかし、それは韓国と日本が、韓国人と日本人がひとかたまりになって互いに争う「戦場」ではない。「日本人全体が「不道德な人間集団」だ」という攻撃をする「戦場」では決してない。

その「戦争」は、日本軍「慰安婦」問題が普遍的な女性人権の深刻な侵害であるのかどうか、国家的次元の深刻な人権侵害に対して加害国が明確に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どうかをめぐる「普遍的価値」に関する戦いである。

「2015合意」は、「現実」を考慮して「価値」は覆い隠そうというものである。そうした「2015合意」を前提にして、韓国と日本の未来世代に何を指向せよとする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結局は「現実」だ、結局は「力」だと教えるのか。それこそ「知識の諦め」「価値の諦め」ではないのか。

日本軍「慰安婦」問題の「真の解決」は、「終息」や「封印」ではなく「指向」でなくてはならない。韓国と日本がどのような価値をともに指向するのかを「決断」する問題である。韓日関係の未来は、その「決断」にかかっている。

(2016年7月30日)

翻訳：橋本繁（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韓国学研究部門・特任研究員）

한일 정부의 2015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시켜야 한다.(한국어)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오늘 심포지엄 안내문의 취지 부분에는 “어떻게 정부간 합의에 혼을
불어넣어 살려갈 것인가”라는 과제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기조강연자들도 “완성”시키고 “개선”시켜 가자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유감스럽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2015 년 12 월 28 일의 '합의'(이하 「2015 합의」)는 완성시킬
수도 개선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살려나갈 수 없는 것이다. 「2015 합의」는
그 근본전제에 있어서 잘못된 '합의'이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물론이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폐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II. 「2015 합의」는 애당초 해결책이 될 수 없다.

1.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으로서의 '법적 책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범죄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책임은 범죄에 대한 것이기에 법적 책임이며, 일본이라는 국가가 져야 하는 것이기에 국가책임이다. 일본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4 반세기 동안 거듭 확인되어 온 상식이다.

1980 년대 말부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1990 년대 초부터 스스로 나서서 피해자임을 밝힌 할머니들이, 거리에서 강연장에서 법정에서 호소한 것이 바로 그 법적 책임이다. 1994 년의 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서, 1996 년의 유인 인권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2000 년의 유엔 인권소위 맥두걸 보고서, 2001 년의 ‘2000 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의 최종 판결문 등이 거듭 확인한 것이 바로 그 국가책임이다.

기조강연자들이 언급한 2014 년 6 월 제 12 차 아시아연대회의의 제언도 바로 그 ‘법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비록 그 제언에서는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주요한 처벌 대상이 사라진 상황임을 고려하여 ‘책임자 처벌’이라는 항목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 속에는 “일본정부 및 군”이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죄할 것”, “사죄의 증거로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일본정부 보유 자료의 전면 공개”와 “추가적인 자료조사”, “추도사업의 실시”, “의무교육과정의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을 포함한 학교교육·사회교육의 실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법적 책임’ 이외의 그 무엇일 수도 없는 것이다.

2. 「2015 합의」가 ‘진전’?

기조강연자들은, 「2015 합의」에서 1)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는 점, 2) 내각총리대신이 사과(おわび)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는 점, 3)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10 억엔)을 거출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1) 하지만, 이미 1995 년에 출범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려 했던 「사과의 편지」에 “우리나라로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진전이 아니다. 물론 “도의적”이라는 단어는 빠졌다. 하지만,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 직후에 아베 총리와 키시다 외상이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질문이 ‘도의적 책임인가 법적 책임인가’이니, ‘법적 책임’이 아니라면 ‘도의적

책임'일 수밖에 없다. 「2015 합의」의 '책임' 또한 '도의적 책임'일 뿐이며, 따라서 '진전'은 없는 것이다.

2) 내각총리대신의 사과와 반성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위의 「사과의 편지」는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되어 있다. 게다가 「사과의 편지」에는 역대 내각총리대신의 서명이 들어 있으나, 「2015 합의」의 '사과'는 '대독사과'이다. 무슨 '진전'이 있었다는 것인가?

3) 키시다 외상은 기자회견 직후에 10 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3 월 17 일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는 “償い金”도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10 억엔은 무엇인가? ‘의료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국민기금’에 출연한 11 억 2 천만엔의 돈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어떠한 책임과도 연결되지 않는 ‘인도적인 지원금’일 뿐이다. 그것을 ‘사죄의 징표로서의 배상’ 혹은 ‘배상적 조치’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오독이다.

4) 2011 년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5 합의」를 촉발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5 합의」는 그 결정이 내놓은 숙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숙제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일간의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5 합의」 이후에도 한일 양국 정부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이 점에서도 ‘진전’은 없는 것이다.

3. 「2015 합의」는 ‘퇴보’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5 합의」에는 어떠한 ‘진전’도 없다. 반면에 ‘퇴보’는 명확하다. 「2015 합의」에는 「코오노담화」에서 명확하게 인정되었던 ‘강제성’, 「코오노담화」는 물론이고 「사과의 편지」에서도 선언되어 있던 ‘역사교육’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2007년 3월 16일에 제1차 아베내각이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각의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아베내각이 출범한 후, 「코오노담화」의 취지를 살려 대다수의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아베내각이 미국 등의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을 삭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2015 합의」는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침묵은 곧 묵인이다. 그런데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2015 합의」는 명백한 ‘퇴보’인 것이다.

III. ‘시간이 없다’? ‘현실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다’?

피해자들이 삶의 끝을 눈 앞에 두고 있으니 「2015 합의」를 살려야 하는가? 1990년대 초에 문제가 본격화되었을 때부터 이미 피해자들은 고령이었고 시간이 없었다. 피해자들은 ‘국민기금’의 ‘償い金’을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 이후 20년 넘게 참으로 시간이 없었음에도 ‘진정한 해결’을 하라고 호소해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애당초 해결책이 될 수 없는 「2015 합의」를 내밀며 시간이 없으니 받으라고 다그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무엇보다 그 아프고 힘겨운 오랜 세월을 헤쳐 온 피해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일본의 현실을 생각할 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최대한이니, “낙제점 수준의 위안부 인식을 지닌 아베 총리로부터” 이만큼이라도 얻어냈으니 「2015 합의」를 살려야 하는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그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분들의 이야기이니 결코 그 무게가 가벼울 수 없다. 하지만, 지난 4 반세기의 세월 동안 온 몸을 바쳐 ‘진정한 해결’을 호소해온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절절한 호소에 호응한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가해자의 형편이 이러니 이거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다그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매우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이건 아니다.

애당초 「2015 합의」 정도라면 굳이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하지도 않다. 한국은 1993 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2002 년에 기념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일본정부로부터 10 억엔의 ‘지원금’을 굳이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화해·치유재단’이라는 목적 불명의 기구를 만들 필요도 없다. 한국의 법률에 따라 지원과 기념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IV. 역사에 죄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함께 ‘전쟁’에 나서자. - 맺음말에 대신하여

「주최자의 개최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역사전쟁’의 장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 한국인과 일본인이 한덩어리가 되어 서로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다. “일본인 전체가 ‘부도덕한 인간집단’이라는 식의 공격”을 하는 ‘전쟁터’가 결코 아니다.

그 ‘전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보편적 여성인권의 심각한 침해인가 아닌가,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 국가가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니가를 둘러싼 ‘보편적인 가치’에 관한 싸움이다.

「2015 합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치’는 덮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2015 합의」를 전제로 삼고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지향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현실’이다, 결국은 ‘힘’이다라고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지식의 체념’, ‘가치의 체념’ 아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종식’이나 ‘봉인’이 아니라, ‘지향’이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문제이다. 한일관계의 미래는 그 ‘결단’에 달려있다.